
2023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11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21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43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89
VI. 심층 분석	97
VII. 향후 계획	113

붙임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

Ⅰ.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I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상 기관

-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 발표 → 행정·공직유관 유형은 총 498개 기관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I (장관급)	II (차관급)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III (중점)	IV (지방 공사공단)	V (연구원)			광역	기초 (시)
				I (시)	II (군)	III (구)										
628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39	21	16	22	17	75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①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공직유관단체, ② 국공립대학, ③ 공공의료기관, ④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평가·분석

※ 평가대상 629개 기관 중 1개 기관(경기교통공사, 공직유관단체 IV 유형)은 설문 유효표본 부족으로 결과 미발표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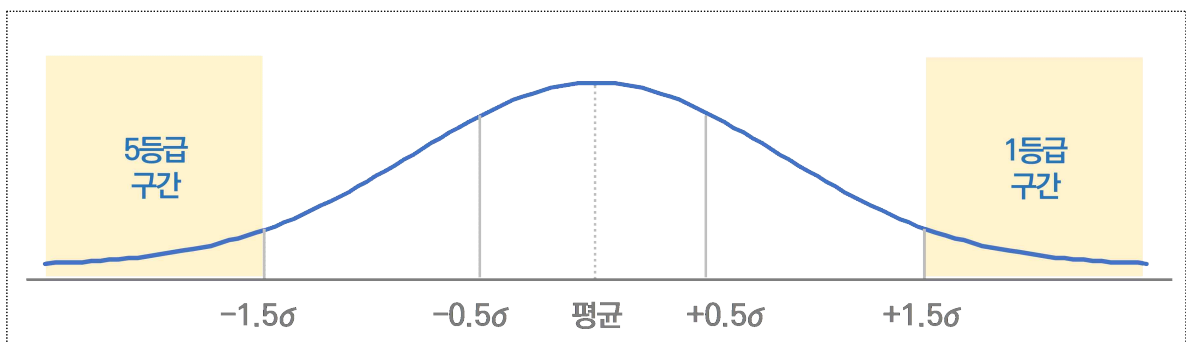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방법
청렴체감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 ※ 측정항목 : 부패인식 7개(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등), 부패경험 2개(경험, 빈도) ※ 조사대상 : 외부 민원인·업무경험자, 내부 구성원 등 약 22.4만명 	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내부구성원 설문조사를 통한 시책효과성 체감 정도 평가 ※ 평가지표 :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 관심과 노력,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시책효과성 등 12개 지표 	정량·정성평가, 설문조사
부패실태 (10%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정량(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단,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종합청렴도 한정)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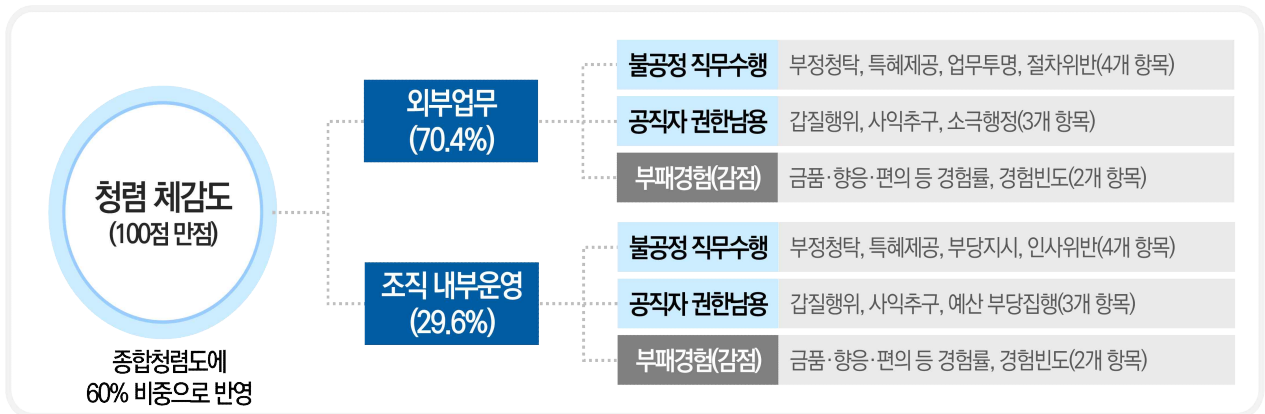
□ 개요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설문 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 평가 모형

- 외부업무(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대상)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70.4%)와 내부 조직운영(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29.6%)를 가중합산

※ 외부·내부체감도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구분	내용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업무)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 업무 상대방 ▶ (조직 내부운영) 각급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내부 업무별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조직 내부운영)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로만 측정

○ (외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외부 업무과정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과 부패경험 2개 항목(경험률, 빈도)은 외부·내부체감도 공통 항목

구분		설문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4%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4%
		업무투명	투명한 업무처리 (23년 신규)	12.7%
	공직자의 권한남용	절차위반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1.8%
		갑질행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0%
		사익추구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6.0%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7%
부패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부패경험 빈도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내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내부 조직운영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하여 산출

※ 부패인식 4개 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과 부패경험 2개 항목(경험률, 빈도)은 외부·내부체감도 공통 항목

구분		설문항목	내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5.7%
		특혜제공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4.9%
		부당지시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14.4%
		인사위반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12.7%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2%
		사익추구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15.6%
		예산 부당집행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3.5%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부패경험 빈도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평가 방법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224,723명

구분	규모(명)	조사 대상
외부체감도	157,627	'22. 7. 1. ~ '23.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체감도	67,096	'23. 6. 30. 기준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

* '22. 7. 1. ~ '23. 6. 30.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3.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체감도 95%, ± 0.4점/ 내부체감도 95%, ± 0.7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개요

-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촉진

□ 평가 모형

- 추진체계(2개), 추진실적(9개),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공통)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자치단체(17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등 272개 기관은 전체지표(12개) 적용
 - (특화) 기초자치단체(226개), 국공립대학(16개) 및 공공의료기관(22개) 등 264개 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지표 적용
 - ※ 특화모형 적용기관은 10개 지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단, 본 결과보고서에는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유형 통계는 제외
 - (별도) 지방의회(92개), 시도경찰청(18개)은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별도 지표(7개) 적용
 - ※ 시도경찰청의 평가결과는 별도 발표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제공
 - ※ 단, 본 결과보고서에는 지방의회·시도경찰청 유형 통계는 제외



< 청렴노력도 지표 >

연번	구분	항목	특화지표 해당 여부	가중치
1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6%
2	추진실적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20%
3	추진체계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15%
4	추진실적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10%
5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10%
6	추진실적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10%
7	추진실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8%
8	추진실적	부패방지 제도 구축	×	10%
9	추진실적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1%
10	추진실적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7.5점 ~ 0
11	추진실적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	0 ~ 2.5점
12	시책 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 내부 구성원 설문 결과(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	○	10%

※ 가중치는 전체 지표(100점 만점) 기준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2. 11. 1. ~ '23. 9. 30.

○ 일부 지표*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청렴체감도 결과) 활용

* 시책효과성 평가, 청렴컨설팅 참여 지표 등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 중 발생한 기관의 부패사건 현황을 점수화하여 평가에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각급 기관 공문 통보, '23.4.28.~5.3.)
 - * '22.7월 ~ '23.11월

□ 평가 기준

-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건,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등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범위)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 사건만 반영
 - ※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외부 적발

□ 평가 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최대 5점)
 - * 3년 이내('21 ~ '23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자세한 평가 기준 및 방법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각급 기관 공문 통보, '23.4.28.~5.3.)

□ 제재 대상

- 설문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1. 총괄

□ 종합청렴도 점수 및 등급 현황

- 행정기관(중앙, 지방, 교육청)·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12개 유형
 평균 종합청렴도 80.5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전년 대비 -0.7점)
 ※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기관(22개), 지방의회(92개) 유형은 별도 산정
- (영역별)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청렴체감도는 80.0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하락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84.6점, 전년 대비 -1.1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9점, 전년 대비 +0.3점)에서 가장 낮음
 ※ 공직(84.6점) > 교육청(82.1점) > 중앙(80.7점) > 광역(78.6점) > 기초(7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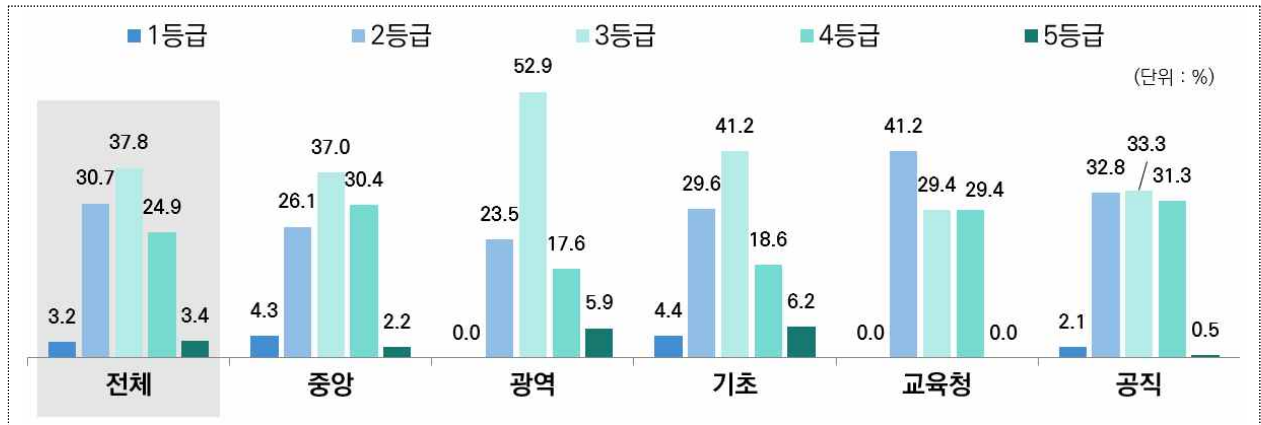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단위 : 점, 괄호안은 전년대비 점수 변화 폭)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전체 (498개)	80.5 (▼0.7)	80.0 (▼2.1)	82.2 (-)
중앙행정기관 (46개)	80.7 (▼2.9)	80.6 (▼2.6)	82.5 (▼4.5)
광역자치단체 (17개)	78.6 (▼2.5)	77.2 (▼3.0)	82.0 (▼5.6)
기초자치단체 (226개)	76.9 (▲0.3)	76.5 (▼2.5)	78.5 (▲2.6)
교육청 (17개)	82.1 (▼1.8)	79.4 (▼0.9)	88.9 (▼2.6)
공직유관단체 (192개)	84.6 (▼1.1)	84.3 (▼1.3)	85.9 (▼1.2)

○ (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6개(3.2%), 5등급 기관은 17개(3.4%)

< 종합청렴도 등급별 분포 현황(498개 기관) >



※ 종합청렴도에 한하여 기관 유형별 4등급 하한선이 전체 기관의 4등급 하한선보다 높은 경우 5등급 → 4등급 일부 조정(20개 기관)

< 기관 유형별 1등급 기관 현황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종합청렴도 (16개)	청렴체감도 (20개)	청렴노력도 (11개)
중앙행정기관	중앙 I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중앙 II (차관급)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자치단체		-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기초 I (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
	기초 II (군)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충북 진천군	경북 예천군, 부산 기장군, 전남 보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진천군	-
	기초 III (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부산 영도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교육청		-	부산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공직 I (공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공직 II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직 III (중점)	한전원자력연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한전원자력연료	대한적십자사
	공직 IV (지방공사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직 V (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큰 폭 상승 기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 기관은 42개 기관이며, 그 중 3개 등급 이상 상승 기관은 1개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 기관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기관명 (42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Ⅰ (장관급)	-
	중앙Ⅱ (차관급)	기상청, 인사혁신처
광역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강원 동해시, 경기 용인시, 경기 포천시(3개 등급 상향),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기초Ⅱ (군)	강원 인제군,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칠곡군, 대구 군위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충북 진천군
	기초Ⅲ (구)	광주 서구, 부산 동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울산 동구
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직Ⅰ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공직Ⅱ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직Ⅲ (중점)	국제방송교류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직Ⅳ (지방공사공단)	경북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직Ⅴ (연구원)	-

- (우수기관) 2년 연속 1등급 달성 기관은 6개 기관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기관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기관명 (6개)
중앙행정기관	중앙Ⅱ (차관급)	질병관리청
기초자치단체	기초Ⅰ (시)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기초Ⅱ (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기초Ⅲ (구)	서울 구로구

※ 중앙Ⅱ, 기초Ⅰ·Ⅱ·Ⅲ 유형 외에는 2년 연속 1등급 달성 기관 없음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총평) 청렴체감도는 80.0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전년 대비 -2.1점), 외부체감도 87.0점(전년 대비 -3.3점), 내부체감도 63.3점(전년대비 +0.7점)
- 외부·내부체감도간 차이는 전년 대비 다소 좁혀졌으나, 여전히 20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임('22년, 27.7점 차이 → '23년, 23.7점 차이)

< 청렴체감도 및 각 영역별 전년 대비 변화 >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84.3점, 전년 대비 -1.3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 전년 대비 -2.5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 공직(84.3점) > 중앙(80.6점) > 교육청(79.4점) > 광역(77.2점) > 기초(76.5점)

< 기관유형별 청렴체감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단위 : 점, 괄호안은 전년대비 점수 변화 폭)

구분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전체 (498개)	80.0 (▼2.1)	87.0 (▼3.3)	63.3 (▲0.7)
중앙행정기관 (46개)	80.6 (▼2.6)	87.5 (▼3.2)	64.3 (▼0.9)
광역자치단체 (17개)	77.2 (▼3.0)	81.9 (▼5.1)	66.0 (▲1.9)
기초자치단체 (226개)	76.5 (▼2.5)	83.8 (▼3.9)	59.1 (▲0.6)
교육청 (17개)	79.4 (▼0.9)	83.4 (▼1.8)	69.9 (▲1.3)
공직유관단체 (192개)	84.3 (▼1.3)	91.5 (▼2.4)	67.3 (▲1.3)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는 90.9점(전년 대비 -2.9점)으로 6개 측정 항목('23년 신규 측정 항목 제외)이 전년 대비 하락, 부패경험률도 0.42%로 전년 대비 악화(+0.11%p)

- (인식) 업무투명(86.8점, '23년 신규)·소극행정(88.1점) 항목이 취약, 사익추구(93.5점)·부정청탁(92.7점) 항목이 상대적 우위

※ (연령별/기관유형별) 2~30대 · 중앙행정기관 유형에서 업무투명 항목에 대한 부패인식 매우 저조

※ (시계열)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은 소극행정(-3.0점)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23년	90.9	92.7	90.9	86.8	90.8	91.6	93.5	88.1
'22년	93.8	94.3	93.2	-	93.1	94.2	95.5	91.1
비교	- 2.9	- 1.6	- 2.3	-	- 2.3	- 2.6	- 2.0	- 3.0

- (경험) 금품 등 경험률은 0.42%로 전년 대비 0.11%p 증가하였으며, '편의 제공' 항목의 경험률(0.1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전년 대비 변화 정도 >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상승(68.6점, +0.9점), 부패경험률 감소(1.99%, -0.12%p)로 내부체감도 전년대비 0.7점 상승

- (인식) 연고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55.4점)·갑질행위(62.6점) 항목이 가장 취약, 사익추구(79.2점) 항목이 상대적 우위

※ (근무기간별/직급별) 근무기간 10년 이하·하위직에서 특혜제공, 갑질행위 항목에 대한 부패인식 매우 저조

※ (시계열)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은 부정청탁(+3.9점)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23년	68.6	70.3	55.4	71.4	64.5	62.6	79.2	75.8
'22년	67.7	66.4	55.8	69.8	63.0	63.0	79.0	76.1
비교	+ 0.9	+ 3.9	-0.4	+ 1.6	+ 1.5	-0.4	+ 0.2	- 0.3

- (경험) 금품 등 경험률은 1.99%로 전년 대비 0.12%p 감소하였으며, '편의 제공' 항목의 경험률(1.0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된 항목은 채용 등 사적 이익 제공(+0.29%p)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전년 대비 변화 정도 >



□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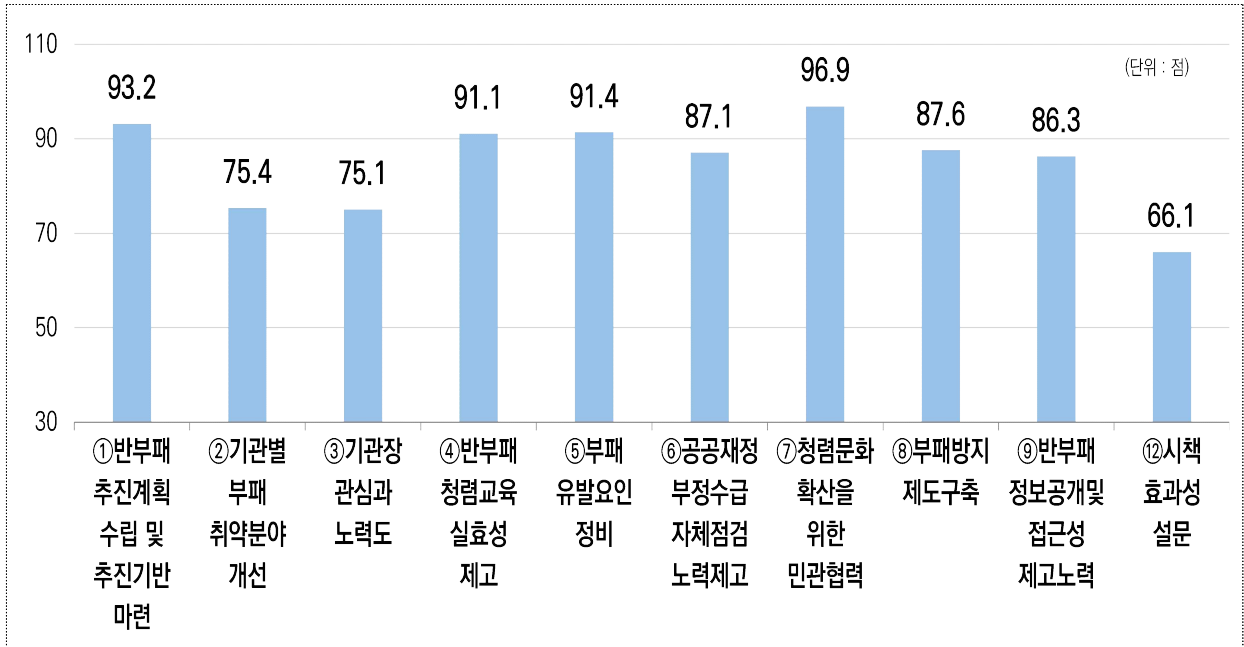
- (총평)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82.2점으로 전년과 동일
- (기관 유형별) 교육청의 점수가 8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8.5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 >



- (점수 경향) 변별력있고 실효성있는 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편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유형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 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 지표 간소화('22년 대비 지표 수 25%↓), 난이도가 낮고 달성률 높은 지표 폐지 등
-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청렴노력도 평가 적용 지표 수 확대('22년 7개→'23년 10개)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강화
 -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관련 지표 : '22년도 85.6점 → '23년도 89.8점
- (지표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96.9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 마련(93.2점) 등 정량지표 항목의 점수가 높은 편
 - 정성평가 지표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75.4점), 기관장의 관심·노력도(75.1점) 항목은 상대평가로 인해 평균 점수가 낮은 편
 - 각급기관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은 66.1점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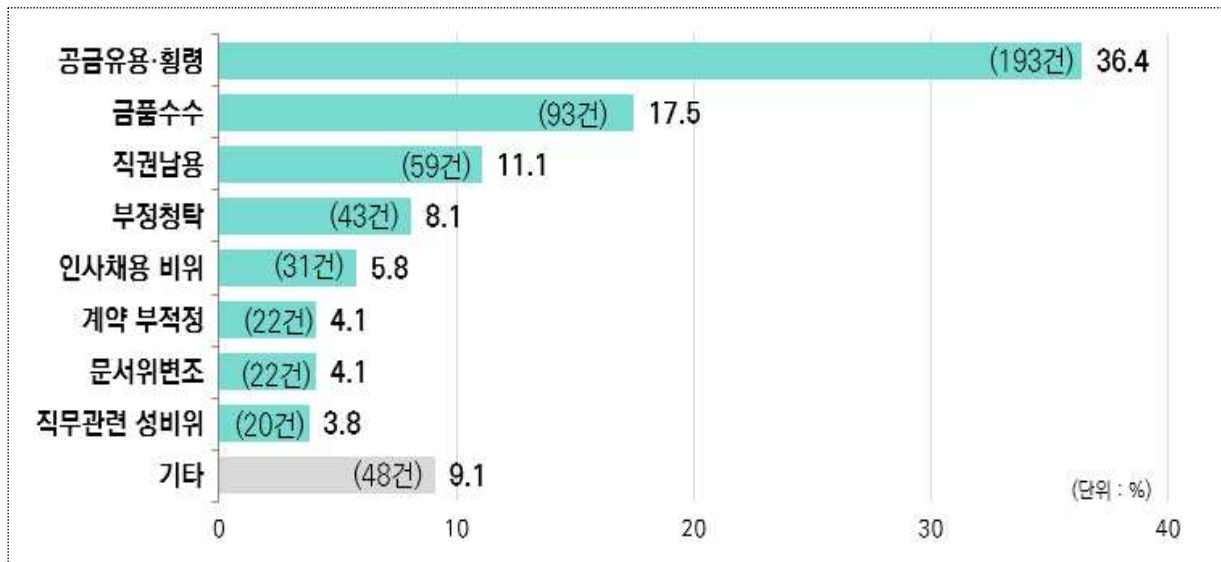
※ 10번 감점지표, 11번 가점지표는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서 별도 분석

- (주요 성과) 각급기관의 내실있는 청렴시책 추진 기반 마련에 기여
 - (반부패 계획) 기관별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등 고위직 주관 회의를 통해 기관 전체에 공유
 - ※ 추진 계획 수립 지표(100% 달성), 고위직 주관 회의 개최 지표(92.6% 달성)
 - (취약분야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 취약분야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내부체감도·시책효과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기관장·고위직 참여) 기관장·고위직 등의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렴시책 추진과정에 기관장의 관심과 솔선수범 독려
 - ※ 교육 대상 고위공직자 11,327명 중 96.3%(10,913명)가 청렴교육 이수
 - (국정과제 추진 지원) 공정채용 규정 마련 등 부패 유발요인 정비(91.4점),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87.1점) 지표 달성 수준 양호
 - ※ 306개 행정기관 중 87.9%(269개)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 260개 지자체·교육청의 51.9%(135개)가 전년대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부패실태 감점 기관수는 160개(평가 대상 기관의 32.1%), 총 부패사건수는 531건, 감점 기관의 감점 평균은 1.1점
- (부패행위 유형) 공금유용·횡령(36.4%, 193건), 금품수수(17.5%, 93건), 직권남용(11.1%, 59건) 등 3가지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65.0% 차지
 - (직위별) 관리직(32.4%)·중간직(23.9%)은 금품수수, 하위직은 공금유용·횡령의 비율(61.2%)이 높음
 - (기관유형별) 중앙(34.8%)·광역(28.0%)·기초(24.9%)의 경우 금품수수, 교육청은 직무관련 성비위(38.5%), 공직유관단체는 공금유용·횡령(67.7%)의 비율이 높음

< 부패유형별 현황 >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 27개 기관(평가 대상 기관의 5.4%)의 29개 사례에 대해 평균 0.9점 감점(감점 기관 평균)
 - 설문조사 호의적 답변 유도(10개), 설문조사 명부 중복·누락(7개), 자체 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5개), 노력도 실적 제출 지연(7개)

Ⅲ.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올해 청렴체감도 전체 평균은 80.0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하락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체감도는 부패 인식의 6개 항목이 전년보다 하락(1개 항목은 '23년도 신규 측정), 부패경험률도 다소 악화되어 전년 대비 3.3점 하락
-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체감도는 부정청탁·부당지시·공정인사 등 부패인식 항목이 개선, 부패경험률도 다소 감소하여 전년 대비 0.7점 상승

< 청렴체감도 점수 전년 대비 변화 >



< 청렴체감도 및 각 세부영역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측정 항목	'23년도 점수	전년 대비 변화 폭
청렴체감도		80.0	▼2.1
외부체감도		87.0	▼3.3
	부패인식	90.9	▼2.9
	부패경험	-3.9	▼0.4
내부체감도		63.3	▲0.7
	부패인식	68.6	▲0.9
	부패경험	-5.3	▼0.2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이 상대적 우위**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 모두 직무 관련 비밀·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 비교 >

(단위 : 점)

		공통 측정 항목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외부	90.9	92.7	90.9	91.6	93.5	86.8	90.8	88.1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절차 기준위반	예산 부당집행
내부	68.6	70.3	55.4	62.6	79.2	71.4	64.5	75.8

□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가 가장 우수, 기초자치단체가 미흡**

- 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3점, 전년 대비 -1.3점)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6.5점, 전년 대비 -2.5점)가 가장 낮은 수준
-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77.2점, 전년 대비 -3.0점)

< 기관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

(단위 : 점, 괄호안은 전년대비 점수 변화 폭)

구분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전체 (498개)	80.0 (▼2.1)	87.0 (▼3.3)	63.3 (▲0.7)
중앙행정기관 (46개)	80.6 (▼2.6)	87.5 (▼3.2)	64.3 (▼0.9)
광역자치단체 (17개)	77.2 (▼3.0)	81.9 (▼5.1)	66.0 (▲1.9)
기초자치단체 (226개)	76.5 (▼2.5)	83.8 (▼3.9)	59.1 (▲0.6)
교육청 (17개)	79.4 (▼0.9)	83.4 (▼1.8)	69.9 (▲1.3)
공직유관단체 (192개)	84.3 (▼1.3)	91.5 (▼2.4)	67.3 (▲1.3)

□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내부체감도간 가장 큰 차이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좁혀졌으나, 여전히 2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임

※ 격차 : '22년, 27.7점 → '23년, 23.7점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의 점수 차이는 기초자치단체(24.7점)에서 가장 크고, 교육청(13.5점)과 광역자치단체(15.9점)에서 작은 편

※ 격차 : 기초(24.7점) > 공직(24.2점) > 중앙(23.2점) > 광역(15.9점) > 교육청(13.5점)

※ 다만, 교육청은 외부체감도에 부패경험률이 높은 운동부 운영 업무가 포함·측정되어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외부체감도 점수가 낮은 경향 고려 필요(내부 측정 항목은 다른 유형과 동일)

< 기관유형별 외부·내부 체감도 비교 >



□ 외부·내부체감도 부패인식 공통항목 간 점수 격차는 다소 완화

- 외부·내부 공통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의 점수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부패인식 점수가 여전히 더 높으나, 외부 인식점수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그 격차는 다소 완화

- 항목별로 특혜제공(점수 격차 35.5점)에서 외부·내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고, 사익추구(점수 격차 14.3점)에서 차이가 가장 작음

※ 격차 : 특혜제공(35.5점) > 갑질행위(29.0점) > 부정청탁(22.4점) > 사익추구(14.3점)

- 전년 대비 외부·내부의 점수격차가 가장 완화된 항목은 부정청탁 ('22년 점수 격차 27.9점 → '23년 점수 격차 22.4점)으로 전년 대비 점수 격차 5.5점 감소

< 외·내부 공통항목 부패인식 비교 >



□ 외부내부체감도 간 부패경험률은 '채용 등 사적이익' 에서 가장 큰 격차

-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보다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약 4.7배 크게 나타나고, 모든 항목에서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더 높음
 - ※ 외부·내부체감도의 측정영역·측정대상이 다르기에 직접적 비교는 한계가 있음
- 외부·내부간 가장 크게 차이나는 항목은 '채용 등 사적이익'으로 약 8.4배 차이
 - ※ '운동부 불법찬조금'의 경우 교육청 유형의 외부체감도 항목으로만 측정함에 따라 비교대상에서 제외

< 외부·내부체감도간 부패경험률 차이 >

(단위 : %)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미공개 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0.42	0.15	0.14	0.18	0.08	0.06	0.03
내부	1.99	0.56	0.67	1.01	0.67	0.15	-
차이	4.7배	3.7배	4.8배	5.6배	8.4배	2.5배	-

2. 외부체감도 평가 결과

(1) 외부체감도 전반

□ 외부체감도 전체 평균은 87.0점으로 전년 대비 3.3점 하락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체감도의 부패 인식은 90.9점, 부패경험은 3.9점 감점(최대 15점 감점)
- 부패인식의 모든 항목이 전년보다 하락, 부패경험률도 다소 증가되어 부패경험 감점 전년 대비 0.4점 악화
 - (인식) 업무투명(86.8점, '23년 신규 측정), 소극행정(88.1점, 전년 대비 -3.0점), 기준·절차위반(90.8점, 전년 대비 -2.3점)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 취약
 - (경험) 민원인이 경험한 금품 등 경험률은 0.42%로 전년(0.31%)보다 증가, 평균 경험빈도는 0.009회로 전년(0.008회)보다 증가

< 외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 (가중치)	'22	'23	차이 ('23-'22)
외부체감도 점수		90.3	87.0	-3.3
부패 인식		93.8	90.9	-2.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84)	94.3	92.7	-1.6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0.174)	93.2	90.9	-2.3
	투명한 업무처리 (0.127)	-	86.8	-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0.118)	93.1	90.8	-2.3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0.140)	94.2	91.6	-2.6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0.160)	95.5	93.5	-2.0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0.097)	91.1	88.1	-3.0
부패 경험 감점 (최대 15점)		-3.5	-3.9	-0.4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0.552)	75.3	72.7	-2.6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0.448)	78.3	75.3	-3.0

□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체감도 큰 폭으로 하락**

- (기관 유형별) **공직유관단체**(91.5점, 전년 대비 -2.4점)의 외부체감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1.9점, 전년 대비 -5.1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
전체 (498개)	87.0	90.9	-3.9
중앙행정기관 (46개)	87.5	90.1	-2.6
광역자치단체 (17개)	81.9	89.3	-7.4
기초자치단체 (226개)	83.8	89.1	-5.3
교육청 (17개)	83.4	91.7	-8.2
공직유관단체 (192개)	91.5	93.4	-1.9

- (시계열)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외부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81.9점, 전년 대비 -5.1점)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점수 >



(2)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은 90.9점으로 전년 대비 2.9점 하락

- (측정 항목별) 사익추구(93.5점, 전년 대비 -2.0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올해 처음 측정한 업무투명(86.8점, 신규 측정)이 가장 낮은 수준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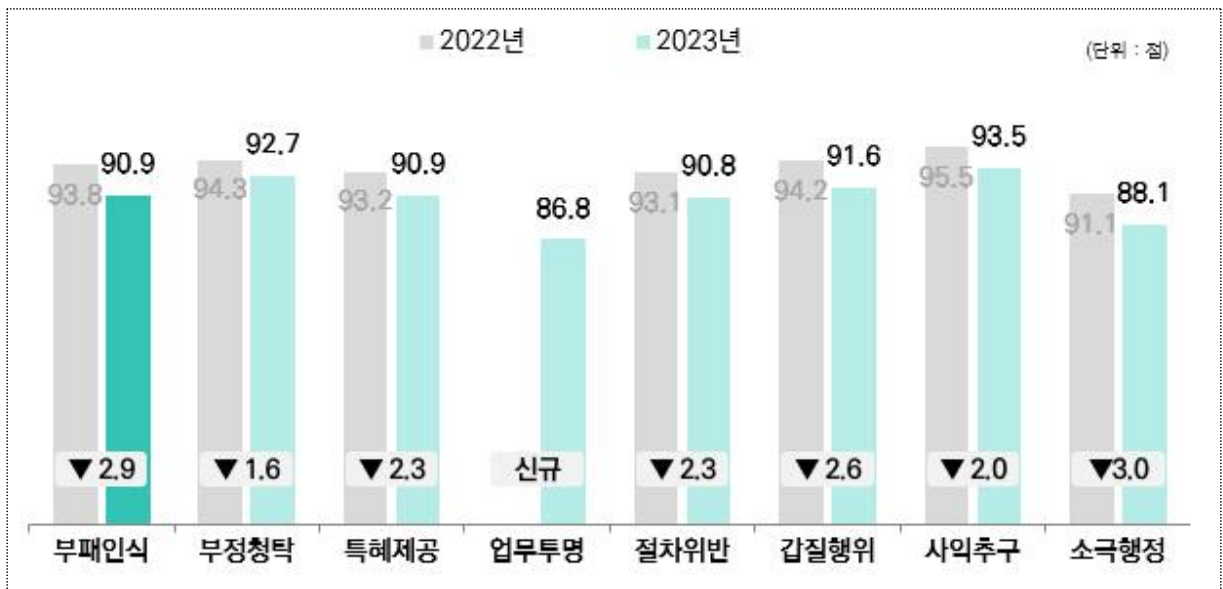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23년	90.9	92.7	90.9	86.8	90.8	91.6	93.5	88.1
'22년	93.8	94.3	93.2	-	93.1	94.2	95.5	91.1
비교	▼2.9	▼1.6	▼2.3	-	▼2.3	▼2.6	▼2.0	▼3.0

- (시계열)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부패인식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은 소극행정(88.1점, 전년 대비 -3.0점)

※ 하락폭 : 소극행정(-3.0점) > 갑질행위(-2.6점) > 특혜제공(-2.3점)
= 절차위반(-2.3점) > 사익추구(-2.0점) > 부정청탁(-1.6점)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 20대가 인식하는 ‘업무투명’ 이 가장 저조

- (연령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의 평균 점수가 92.2점으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은 88.7점으로 가장 낮음
 - 부패인식 점수가 90.9점임을 고려할 때, 30~50대에서의 부패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측정 항목별) 연령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20대에서 인식하는 업무투명 항목의 점수(83.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사익추구(직무관련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항목이 가장 긍정적 결과를 보여,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

< 연령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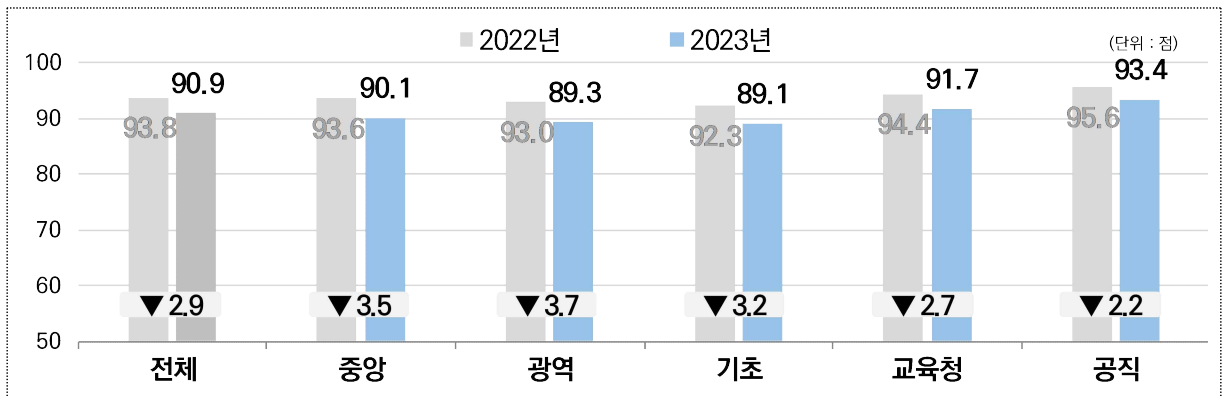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전체	90.9	92.7	90.9	<u>86.8</u>	90.8	91.6	93.5	<u>88.1</u>
20대	90.1	92.4	91.4	<u>83.0</u>	88.6	91.4	93.1	87.7
30대	91.4	93.4	92.2	<u>86.2</u>	90.9	91.9	94.1	88.7
40대	92.2	93.7	92.2	88.4	92.2	92.7	94.5	90.1
50대	91.2	92.7	90.5	88.0	91.5	91.9	93.8	88.7
60대 이상	<u>88.7</u>	90.6	87.9	<u>84.7</u>	88.1	89.8	92.0	<u>84.9</u>

□ 모든 기관 유형에서 '업무투명' 항목 가장 취약

- (유형별) 공직유관단체(93.4점, 전년 대비 -2.2점)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9.1점, 전년 대비 -3.2점)가 가장 낮은 수준
- (시계열)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부패인식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89.3점, 전년 대비 -3.7점)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 (측정 항목별) 업무투명 항목은 모든 기관유형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사익추구 항목은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대적 우위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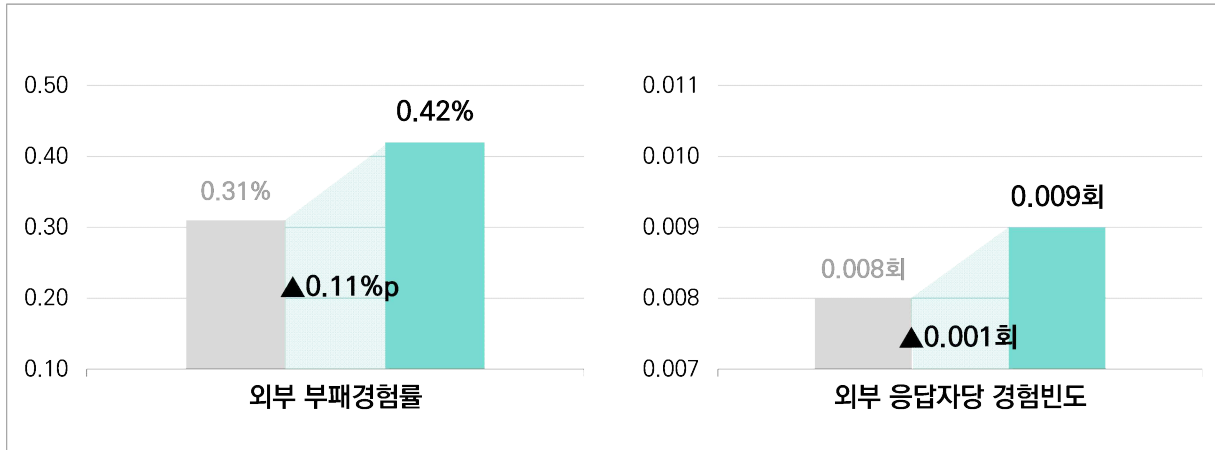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전체	90.9	92.7	90.9	<u>86.8</u>	90.8	91.6	93.5	<u>88.1</u>
중앙	90.1	92.5	91.3	<u>83.7</u>	89.4	90.3	93.3	86.7
광역	89.3	91.4	89.3	85.1	<u>89.2</u>	<u>89.3</u>	92.8	<u>85.1</u>
기초	<u>89.1</u>	<u>90.8</u>	<u>88.4</u>	85.6	89.3	89.9	<u>91.9</u>	85.9
교육청	91.7	93.5	90.3	87.2	91.1	92.5	94.8	89.8
공직	93.4	95.0	93.9	89.0	92.9	94.0	95.5	91.2

[3]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감점은 -3.9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악화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2%로 전년(0.31%)보다 증가했으며, 평균 경험빈도 또한 0.009회로 전년(0.008회)보다 증가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교육청(0.73%, 전년 대비 +0.02%p)에서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0.18%, 전년 대비 +0.04%p)가 가장 낮은 수준
-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0.68%, 전년 대비 +0.23%p)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

(단위 : %, 회, 괄호안은 전년대비 경험률 변화 폭)

분류	경험률	경험빈도
전체 (498개)	0.42 (+0.11%p)	0.009
중앙행정기관 (46개)	0.29 (+0.08%p)	0.007
광역자치단체 (17개)	0.68 (+0.23%p)	0.015
기초자치단체 (226개)	0.51 (+0.16%p)	0.011
교육청 (17개)	0.73 (+0.02%p)	0.017
공직유관단체 (192개)	0.18 (+0.04%p)	0.004

□ '편의 제공' 유형의 부패 경험이 두드러지게 증가

- (경험 유형별)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6가지 항목 중, 금품·향응·편의 제공에 관한 경험률이 0.1% 이상으로 크게 나타남
 - (시계열) 전년 대비 변동폭 분석 결과, '편의 제공' 유형의 부패 경험이 0.07%p 증가하여 가장 악화된 항목으로 나타남
- ※ 편의 제공 경험률 : '22년, 0.11% → '23년, 0.18%

< 전년대비 부패경험률 변동 추이 >



- (기관 유형별) 광역자치단체의 향응(0.32%, 전년 대비 +0.17%p), 편의(0.32%, 전년 대비 +0.16%p)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악화되며 높은 경험률을 보임
- 교육청의 운동부 불법찬조금은 전년 대비 개선(-0.19%p)되었으나 여전히 0.36%로 가장 높은 경험률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미공개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체	0.42	0.15	0.14	0.18	0.08	0.06	0.03
중앙	0.29	0.08	0.15	0.15	0.07	0.02	-
광역	0.68	0.28	0.32	0.32	0.07	0.05	-
기초	0.51	0.20	0.18	0.22	0.11	0.09	-
교육청	0.73	0.19	0.12	0.26	0.11	0.01	0.36
공직	0.18	0.05	0.06	0.08	0.04	0.03	-

□ **부패행위 경험자의 평균 경험 빈도는 연간 약 2.2회**

- 외부체감도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경험빈도는 **0.009회**(전년 대비 0.001회 증가), 평균 규모는 **0.62만원**(전년 대비 +0.15만원) 수준
-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2.20회**(전년 대비 -0.31회), 평균 규모는 **약 145만원**(전년 대비 -8.66만원)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부패 경험률 (%)	부패 경험 총빈도 (회)	부패 경험 총규모 (만원)	부패 경험자 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평균 경험빈도 (회)	평균 경험규모 (만원)	평균 경험빈도 (회)	평균 경험규모 (만원)
전체	0.42 (▲0.11)	1,466.0 (▲269.0)	97,000 (▲23,652)	667 (▲191)	0.009 (▲0.001)	0.62 (▲0.15)	2.20 (▼0.31)	145.43 (▼8.66)
중앙	0.29	122.5	8,698	52	0.007	0.49	2.36	167.27
광역	0.68	139.5	11,255	64	0.015	1.20	2.18	175.86
기초	0.51	787.5	53,044	367	0.011	0.74	2.15	144.53
교육청	0.73	244.0	13,837	103	0.017	0.98	2.37	134.33
공직	0.18	172.5	10,167	81	0.004	0.23	2.13	125.52

※ 경험규모는 참고 지표로 외부체감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참고 1 > **교육청, 운동부 운영 측정업무의 '운동부 불법찬조금' 경험률**

- 교육청의 부패경험률(0.73%)은 전체기관 평균(0.42%)보다 높은 수준
 - 이는 교육청에 **부패경험률이 높은 업무인 운동부 운영(2.40%)** 측정 업무가 포함·측정되는 것의 영향이 큼
- ※ '운동부 불법찬조금' 부패유형은 교육청 운동부 운영 업무 민원인 응답자에게만 부패경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항목

(단위 : %)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전체	0.42	0.15	0.14	0.18	0.08	0.06	0.03
교육청	0.73	0.19	0.12	0.26	0.11	0.01	0.36
운동부 운영 업무	2.40	0.50	0.34	0.67	0.13	0.00	2.14

3. 내부체감도 평가 결과

(1) 내부체감도 전반

□ 내부체감도 전체 평균은 63.3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

- 기관 내부구성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체감도의 부패인식 점수는 68.6점, 부패경험은 5.3점 감점(최대 15점 감점)
- 부패인식 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절차위반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 부패경험 감점은 소폭 악화(-5.3점, 전년 대비 0.2점 악화)
 - (인식) 특혜제공(55.4점, 전년 대비 -0.4점), 인사위반(64.5점, 전년 대비 +1.5점), 갑질행위(62.6점, 전년 대비 -0.4점) 항목이 상대적 저조
 - (경험)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금품 등 경험률은 1.99%로 전년(2.11%)보다 감소, 평균 경험빈도는 0.048회로 전년(0.057회)보다 감소

< 내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22	'23	차이 (23-'22)
내부체감도 점수		62.6	63.3	+0.7
부패 인식		67.7	68.6	+0.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57)	66.4	70.3	+3.9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0.149)	55.8	55.4	-0.4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0.144)	69.8	71.4	+1.6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0.127)	63.0	64.5	+1.5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0.132)	63.0	62.6	-0.4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0.156)	79.0	79.2	+0.2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0.135)	76.1	75.8	-0.3
부패 경험 감점 (최대 15점)		-5.1	-5.3	-0.2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0.552)	63.9	63.5	-0.4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0.448)	68.1	66.7	-1.4

□ **광역자치단체의 내부체감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유형별로 내부체감도 점수는 **교육청**(69.9점, 전년 대비 +1.3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59.1점, 전년 대비 +0.6점)가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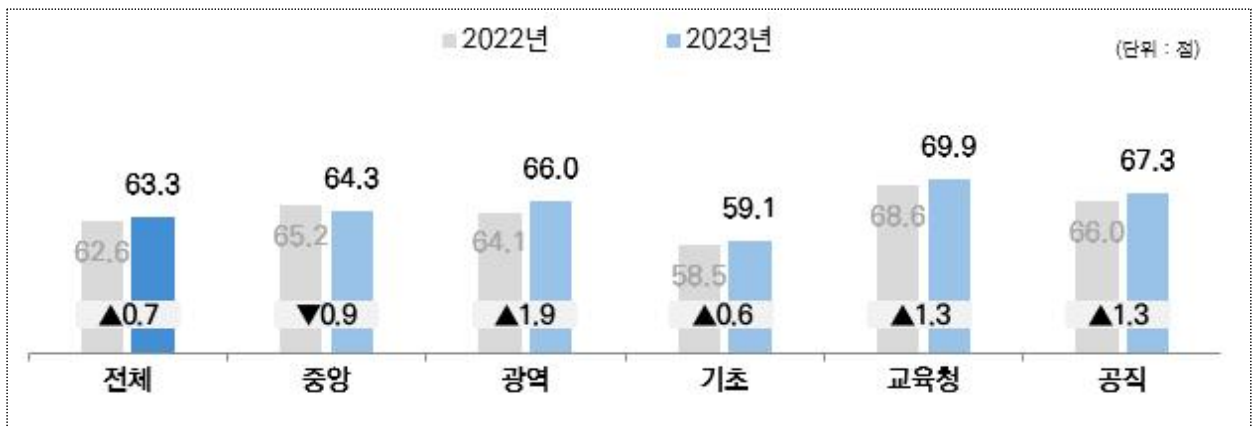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
전체 (498개)	63.3	68.6	-5.3
중앙행정기관 (46개)	64.3	69.7	-5.5
광역자치단체 (17개)	66.0	70.2	-4.3
기초자치단체 (226개)	<u>59.1</u>	<u>65.1</u>	<u>-6.0</u>
교육청 (17개)	69.9	73.2	-3.3
공직유관단체 (192개)	67.3	71.9	-4.6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 대비 점수 상승
 -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 유형은 **광역자치단체(+1.9점)**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점수 >



(2)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은 68.6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개선

- (측정 항목별) 사익추구(79.2점, 전년 대비 +0.2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특혜제공(55.4점, 전년 대비 -0.4점)이 가장 낮은 수준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 항목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23년	68.6	70.3	55.4	71.4	64.5	62.6	79.2	75.8
'22년	67.7	66.4	55.8	69.8	63.0	63.0	79.0	76.1
비교	▲0.9	▲3.9	▼0.4	▲1.6	▲1.5	▼0.4	▲0.2	▼0.3

- (시계열) 부정청탁(70.3점, 전년 대비 +3.9점), 부당지시(71.4점, 전년 대비 +1.6점), 인사위반(64.5점, 전년 대비 +1.5점) 항목이 큰 폭으로 상승

※ 상승 : 부정청탁(+3.9점), 부당지시(+1.6점), 인사위반(+1.5점), 사익추구(+0.2점)
하락 : 예산 부당집행(-0.3점), 특혜제공(-0.4점), 갑질행위(-0.4점)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 모든 기관 유형에서 '특혜제공' 항목 가장 취약

- (기관 유형별) 교육청(73.2점, 전년 대비 +0.5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5.1점, 전년 대비 +0.8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교육청(73.2점) > 공직(71.9점) > 광역(70.2점) > 중앙(69.7점) > 기초(65.1점)

- (시계열)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부패인식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광역자치단체(70.2점, 전년 대비 +1.4점)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 (측정 항목별) '특혜제공'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익추구'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상대적 우위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단위 : 점)

구분	계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전체	68.6	70.3	<u>55.4</u>	71.4	64.5	<u>62.6</u>	79.2	75.8
중앙	69.7	73.8	<u>56.3</u>	72.4	64.8	62.4	80.4	76.4
광역	70.2	71.0	<u>56.1</u>	72.5	67.1	64.9	80.8	78.4
기초	<u>65.1</u>	65.0	<u>50.8</u>	68.3	59.9	60.1	76.6	74.0
교육청	73.2	74.6	<u>60.8</u>	75.3	72.2	64.4	83.4	80.9
공직	71.9	75.2	<u>60.0</u>	74.4	68.9	65.1	81.4	77.2

□ 근무기간 10년 이하에서 특혜제공,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인식 저조

- (근무기간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근무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1년 이상 근무자들의 부패인식 점수가 76.7점으로 가장 긍정적
 - 반면, 근무기간이 3~10년일 때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패인식 전체 평균(68.6점)보다 낮은 유일한 그룹
- (측정 항목별) 근무기간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근무기간 20년 이하에서의 '특혜제공' 항목과 근무기간 10년 이하에서의 '갑질 행위' 항목들이 60점 이하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근무기간 31년 이상에서는 '부당지시'에 대한 인식이 80.2점으로 긍정적인 편
 - 또한, 근무기간 21년 이상부터는 '사익추구'와 '예산 부당집행'에 대한 부패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근무기간별	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
전체	68.6	70.3	<u>55.4</u>	71.4	64.5	<u>62.6</u>	79.2	75.8
31년 이상	76.7	76.7	64.2	80.2	70.6	76.1	85.2	83.1
21~30년	74.9	75.5	61.9	78.2	69.6	72.7	83.7	81.8
11~20년	69.9	71.2	<u>56.4</u>	72.8	65.4	65.1	80.2	77.7
3~10년	<u>66.2</u>	68.6	<u>52.7</u>	68.7	63.0	<u>57.9</u>	77.5	73.4
2년 이하	69.1	71.7	<u>56.3</u>	71.4	68.1	<u>59.8</u>	79.8	75.4

□ 하위직에서의 특혜제공,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인식 저조

- (직급별) 부패인식 측정 항목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직의 부패인식 점수가 8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급이 낮아질수록 부패인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하위직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측정 항목별) 직급별 - 측정 항목별 교차 분석 결과, 중간직과 하위직 그룹에서 '특혜 제공' 항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패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관리직의 '사익추구(87.3점)' 항목과 '예산 부당집행(85.0점)' 항목

< 직급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직급별	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
전체	68.6	70.3	55.4	71.4	64.5	62.6	79.2	75.8
관리직	80.1	80.1	70.6	82.2	75.4	79.2	87.3	85.0
중간직	72.3	72.4	59.3	75.7	66.1	70.1	81.9	79.9
하위직	68.0	70.3	54.3	70.8	64.1	60.8	79.1	75.6
기타(공무직 등)	68.4	70.3	55.6	71.0	68.1	60.8	78.2	74.0

(3)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감점은 -5.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악화

- 기관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99%로 전년(2.11%)보다 감소했으며, 평균 경험빈도 또한 0.048회로 전년(0.057회)보다 감소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2.40%, 전년 대비 -0.08%p)에서 가장 높고, 교육청(1.31%, 전년 대비 -0.38%p)에서 가장 낮음
 - 중앙행정기관의 부패경험률이 전년 대비 증가(1.97%, 전년 대비 +0.19%p)하였으며, 그 외 기관유형에서는 부패경험률이 감소하였음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

(단위 : %, 회, 괄호안은 전년대비 경험률 변화 폭)

분류	경험률	경험빈도
전체 (498개)	1.99 (-0.12%p)	0.048
중앙행정기관 (46개)	1.97 (+0.19%p)	0.049
광역자치단체 (17개)	1.60 (-0.42%p)	0.040
기초자치단체 (226개)	2.40 (-0.08%p)	0.057
교육청 (17개)	1.31 (-0.38%p)	0.028
공직유관단체 (192개)	1.78 (-0.17%p)	0.045

- (경험률 구간별) 부패경험률 3% 이상인 기관은 111개 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유형에서는 경험률 5% 이상인 기관이 각각 8.7%, 8.4%로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구간 분포 >

(단위 : 개, %)

구분	계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0%
전체 (498개)	100.0	6.2	4.8	11.2	20.7	26.9	15.5	14.7
중앙 (46개)	100.0	8.7	6.5	6.5	21.7	30.4	8.7	17.4
광역 (17개)	100.0	0.0	5.9	0.0	11.8	64.7	11.8	5.9
기초 (226개)	100.0	8.4	5.3	16.4	20.4	21.2	16.8	11.5
교육청 (17개)	100.0	0.0	0.0	0.0	23.5	41.2	23.5	11.8
공직 (192개)	100.0	4.2	4.2	8.3	21.4	28.1	15.1	18.8

□ '편의 제공' 가장 취약, '채용 등 사적이익' 전년 대비 가장 악화

- (경험 유형별)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5가지 항목 중, '향응·편의 제공'과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에 관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시계열)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0.67%)이 전년대비 가장 악화
 - 이는 전통적인 부패 유형인 금품(0.56%)보다 높고 향응(0.67%)과 동일한 수준

< 전년대비 부패경험률 변동 추이 >



- (기관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편의 제공' 경험률이 1.35%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기관 유형에 무관하게 '편의 제공' 경험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개 항목의 경험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미공개정보
전체	1.99	0.56	0.67	1.01	0.67	0.15
중앙	1.97	0.41	0.69	1.35	0.38	0.05
광역	1.60	0.47	0.52	0.83	0.63	0.19
기초	2.40	0.73	0.73	1.00	1.02	0.15
교육청	1.31	0.39	0.35	0.64	0.41	0.07
공직	1.78	0.48	0.70	1.03	0.46	0.18

□ **부패행위 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연간 약 2.4회**

- 내부체감도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경험빈도는 **0.048회** (전년 대비 0.009회 감소), 평균 규모는 **1.75만원**(전년 대비 0.8만원 감소) 수준
-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2.42회**(전년 대비 0.26회 감소), 평균 규모는 **약 88.15만원**(전년 대비 32.51만원 감소)
- 기관 유형별로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광역자치단체(2.53회)**가 가장 많고, **교육청(2.16회)**이 가장 적음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부패 경험률 (%)	부패 경험 총빈도 (회)	부패 경험 총규모 (만원)	부패 경험자 수 (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평균 경험빈도 (회)	평균 경험규모 (만원)	평균 경험빈도 (회)	평균 경험규모 (만원)
전체	1.99 (▼0.12)	3,236.5 (▼56.5)	117,678 (▼30,850)	1,335 (▲104)	0.048 (▼0.009)	1.75 (▼0.80)	2.42 (▼0.26)	88.15 (▼32.51)
중앙	1.97	388.0	11,549	155	0.049	1.47	2.50	74.51
광역	1.60	147.0	6,990	58	0.040	1.92	2.53	120.51
기초	2.40	1,431.0	44,627	607	0.057	1.77	2.36	73.52
교육청	1.31	151.0	8,669	70	0.028	1.62	2.16	123.84
공직	1.78	1,119.5	45,844	445	0.045	1.84	2.52	103.02

※ 경험 규모는 참고지표로 내부체감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청렴노력도 평균점수는 82.2점으로 전년과 동일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8.9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85.9점), 중앙행정기관(82.5점), 광역자치단체(82.0점) 순이며, 기초자치단체(78.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단, 특화지표만 적용받는 유형(기초자치단체)은 모형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시 유의

< 기관유형별 청렴노력도 및 각 영역별 점수 >



- 전년 대비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유형은 점수 하락
 - 주요 원인은 평가지표 개편*으로 변별력 있고 실효성 있는 지표 위주 평가 실시로 인한 효과로 분석

* 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지표 간소화('22년 대비 25%↓), 달성률 높은 지표 폐지 등

- 지표별로는 민관협력(96.9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 마련(93.2점) 등 정량지표 항목의 점수가 높은 편
 - 특히, 국정과제 관련 지표인 공정채용 표준기준 확산을 위한 '부패 유발요인 정비'(91.4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87.1점) 지표도 달성 수준 양호
 - 반면, 정성평가 지표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75.4점), '기관장의 관심·노력도'(75.1점) 항목은 상대평가로 인해 평균 점수가 낮은 편
 - 부패 취약분야 도출·개선 지표 배점이 전년대비 높아짐에 따라, 각급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통한 분석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체계적 전략 수립 등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 * 주요 사례 등은 본 보고서 해당 지표별 평가결과 참조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지표명	점수	비고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93.2	정량
②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75.4	정성
③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75.1	정성
④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91.1	정량
⑤ 부패 유발요인 정비(공정채용 규정 마련 등)	91.4	정량
⑥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87.1	정량
⑦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96.9	정량
⑧ 부패방지 제도 구축(제도개선 권고 이행)	87.6	정량
⑨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86.3	정량
⑩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0.1	정량
⑪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0.4	정량
⑫ 시책효과성 설문(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평가	66.1	설문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 기관

- 498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은 11개(2.2%) 기관이며, 2년 연속 1등급 기관은 1개(국민건강보험공단)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1등급 기관 및 2년 연속 1~2등급 기관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23년도 1등급 (11개)	'22-'23년도 연속 1~2등급 (85개)
중앙행정기관	중앙 I (장관급)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중앙 II (차관급)	-	관세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질병관리청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기초 I (시)	-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여주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전북 정읍시
	기초 II (군)	-	경남 거창군, 경남 남해군,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예산군, 충남 홍성군, 충북 음성군
	기초 III (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강남구, 서울 광진구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양천구, 서울 용산구
시도교육청		-	경기 교육청, 경남 교육청, 대구 교육청, 울산 교육청, 전남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직 I (공기업)	강원랜드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공직 II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공직 III (중점)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공직 IV (지방공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공직 V (연구원)	-	('22년 미측정)

- 2년 연속 평가를 실시한 469개 기관 중 2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33개(7.0%)이며,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1.1%)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전년 대비 상승 기관 현황 >

(유형내 기관명은 가나다 순)

구분		2개 등급 상승 (33개)	3개 등급 상승 (5개)
중행정 기관	중앙 I (장관급)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중앙 II (차관급)	-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기초 자치 단체	기초 I (시)	강원 춘천시, 경기 광주시, 경기 포천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김제시
	기초 II (군)	경북 울진군, 경북 칠곡군, 대구 군위군, 대구 달성군, 전남 함평군, 전북 장수군	-
	기초 III (구)	서울 중구, 울산 북구	서울 송파구
시도교육청		-	-
공직 유관 단체	공직 I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공직 II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직 III (중점)	국제방송교류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공직 IV (지방공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
	공직 V (연구원)	(‘22년 미측정)	(‘22년 미측정)

2.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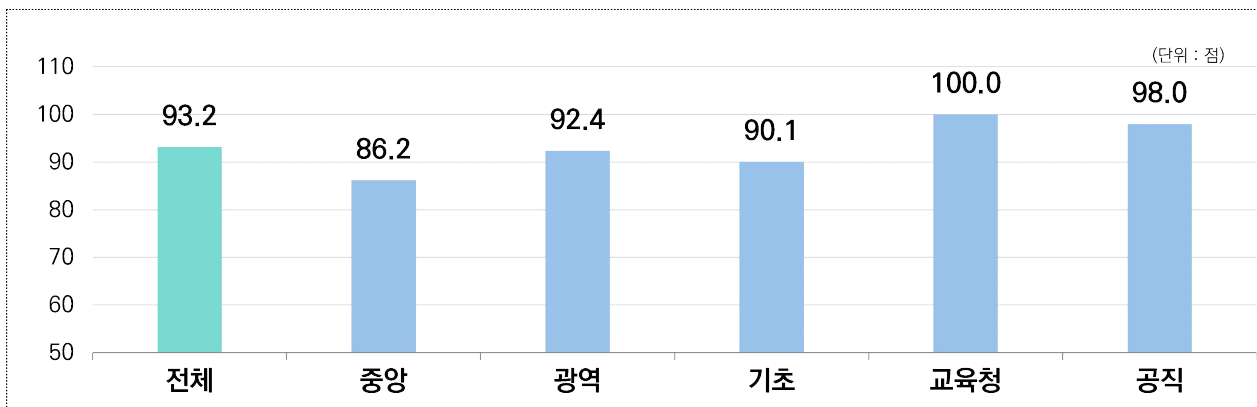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추진계획 수립)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평가
-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각급 기관의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부패 추진 과제 등을 주제로 회의 실시

○ 평가결과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의 평균점수는 93.2점으로, 청렴노력도 전체 평균점수(82.2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100.0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98.0점), 광역자치단체(92.4점) 순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추진계획 수립) '23년도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평가보고서 틀에서 벗어나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 조성
 - 총 498개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각급기관의 취약분야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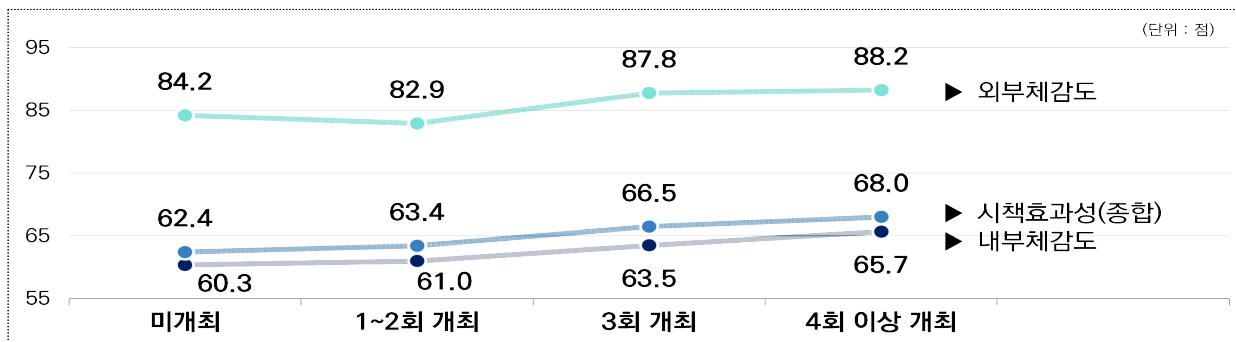
< 기관유형별 지표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 수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관 회의 운영				평균
		기한내 수립	기한후 수립	미수립	0회	1~2회	3회	4회 이상	
전체	498	492	6	0	37	58	315	88	2.8
중앙	46	43	3	0	8	7	23	8	2.5
광역	17	17	0	0	1	3	10	3	2.8
기초	226	225	1	0	25	41	135	25	2.5
교육청	17	17	0	0	0	0	12	5	3.4
공직	192	190	2	0	3	7	135	47	3.2

-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반부패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주요 간부가 같이 논의하는 회의 운영을 통해 청렴업무 추진 동력 확보
 - 기관장 주관 회의를 통해 고위직 간부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관 차원의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 마련
 - 특히,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내·외부 청렴체감도가 높고,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시책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

< 기관장(부기관장 포함) 주관회의 횟수별 청렴수준 인식 >



□ 보완사항

- 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기획력 등 질적 측면에서 기관 유형 간에 수준 차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우수기관 사례를 지속 확산 필요
 -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의 청렴수준 분석 과정 없이, 우수기관의 시책 및 청렴노력도 지표 추진일정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 일부 기관은 단순 반부패 시책 추진 진행상황 점검 등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사례 발생
- 조속한 청렴노력도 지표 확정·안내 추진
 - 각급기관에서 연초부터 계획 수립, 기관장 주관 회의 실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우수사례

-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관장 주관 회의 활용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추진
 - 기관장 주관 회의 개최 시 짜임새 있는 회의자료를 준비하였고, 취약분야 소관부서장이 직접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참석자간 실효적인 논의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
-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맞춤형 대책 마련
 - 각 업무파트별 특성을 반영한 부패리스크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기관장이 직접 주관(각 본부별 총 4회)하여 청렴시책 추진 동력 마련
-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계적인 반부패 추진 협의체 운영
 - 기관장 주관 '청렴추진협의체'와 부기관장 주관 '청렴추진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기관 업무 전반의 청렴시책 추진체계 마련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개요

○ 평가지표

-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각급기관별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평가기준) 분석수단·방법, 의견수렴 적절성, 부패연관성, 도전성 등

- (개선노력·효과) 도출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효과성 평가

※ (평가기준) 개선과제의 실효성, 이행수단의 적절성 및 독창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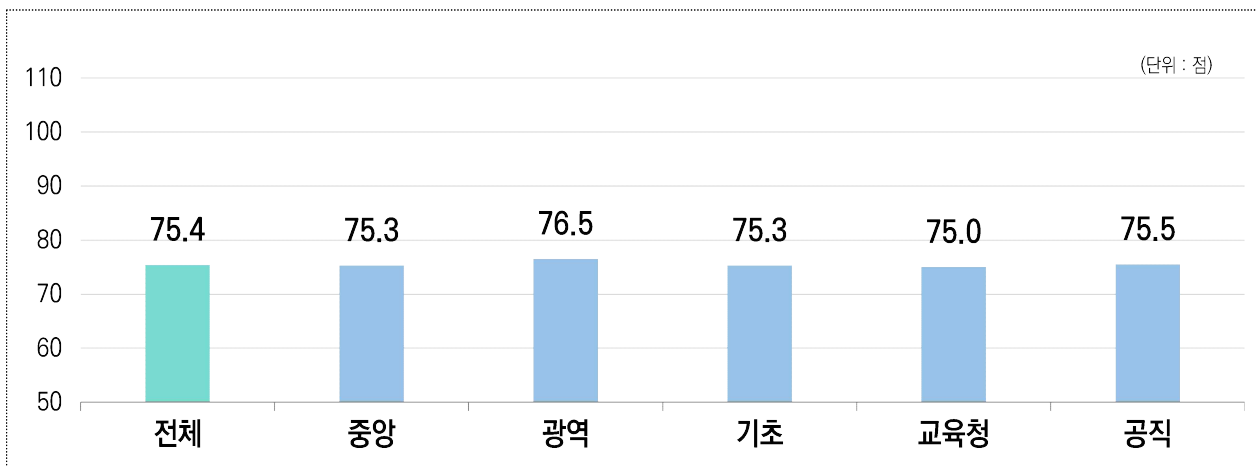
○ 평가결과

-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의 평균점수는 75.4점

- 정성평가 지표로, 기관 유형별로 등급화 후 점수부여하는 상대 평가 배점구조로 인해 타 정량지표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

※ 각 유형별(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공직 유관단체)로 등급화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 기관 유형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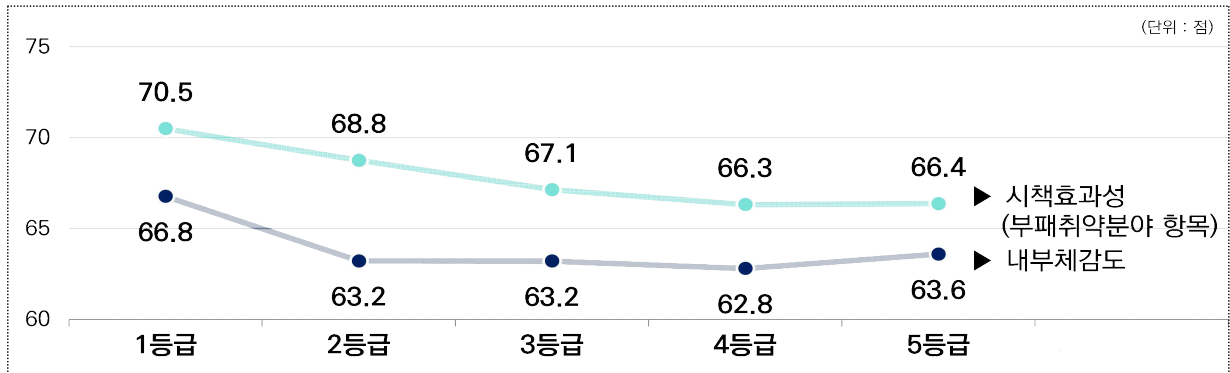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각급기관의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대응 역량 향상

- 다수 기관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료 활용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 * 내·외부 감사자료, 언론보도, 종합청렴도평가 등 대내외 평가자료, SWOT 분석, K-CP 진단기법(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용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내·외부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수립
- 해당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시책효과성 평가(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체감도(내부직원 평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 등급별 청렴수준 인식 >



○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다수 추진

- 기관의 업무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부서의 추진역량을 집중하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참고 : 주요 과제 】

구분	주요내용
내부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업무지시, 갑질근절,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추진 ✓ 문제진단부터 대안모색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확대, 다양한 교육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 상-하간 소통 강화, 신고 프로세스 확립, 실질적 행동변화를 위한 행위규범 재정립 등 실시
외부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를 유발하는 업무절차나 기준개선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량행위 등에 대한 개선 추진 ✓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담당자 교육, 캠페인 등 종합적 개선과제 추진

□ 보완사항

- 기관별 실질적인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일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및 다각적 분석없이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단순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과성에 한계
- 우수기관의 추진 사례 전파를 통한 벤치마킹 기회 부여
 -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도 하위기관 또는 청렴업무 추진기반이 미비한 기관 등에 전수

□ 우수사례

<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①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 근로감독 업무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등이 방문·우편 접수로 이루어져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 진단
- 「노동포털」을 통해 모바일로 근로감독 관련 신고·접수 및 진행상황 확인까지 가능토록 개선하여 투명성 제고

② [국세청] 국고수납 공무원의 횡령 및 사적유용 방지체계 마련

- 전국 133개 세무서 관리실태 전수점검('23.3.~4월) 및 국고금 수납 업무 이원화(전산입력, 통장출금 담당자 분리)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월별 순환근무제 도입
- 국고금 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국고금 출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23.9.)

③ [서울 강남구] 데이터 기반 부패취약분야 진단·도출

- 자체 클린콜 운영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세입·세출구조 특성 분석, 부패 취약 업소 최다 밀집지역, 고충민원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진단·도출하고 전략과제 수립

④ [경상남도교육청]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계약업무 프로세스 개선

- 내·외부 의견수렴, 감사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약업무 취약요인(과도한 서류 요구, 요청서류 상이 등) 도출 및 TF 구성
 - 관련부서 협업, 전문가 자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존 10종이었던 서류를 1종으로 통합하고, 담당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업무절차 표준화
- * 업무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 계약상대방 88.7%, 계약담당자 90.7%

⑤ [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 AI 기반 입찰담합포착시스템 도입·운영

- 과거 전자입찰 데이터 DB화·분석을 통한 담합 패턴 도출 및 의심 모델 정형화, 알고리즘 AI 학습을 통해 담합행위 발전사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 업체간 투찰시간 및 가격 편차, 재입찰 시 입찰가격 편차 등을 종합 분석
- 계량화된 유형별 담합 확률 정보를 확인하고, 담합 포착 시 담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위 제소여부 결정에 활용

⑥ [한국은행] 반부패 법령 검색기반 대화형 플랫폼 「청렴 Chat GPT」 도입

- '계약 및 관리', '예산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이 규정 미숙지로 부패 노출 예방을 위해 반부패 관련 법령·규정 검토, 사례조사 등이 가능토록 AI 기술을 활용한 Chat GPT 개발('23.9.)
- 1회 검색을 통해 가장 관련성 높은 규정 뿐만 아니라 타 규정에서 규율하는 기타 준수사항 및 각종 신고서식 등을 동시에 표출

<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① [기상청] 상향식 인사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 종합청렴도 평가 및 자체 설문조사 등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도출,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 간부·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 직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화, 인사운영 기준 전면 개편(승진·전보·정보공개 기준, 인사 비위행위 감시) 및 지침 개정 등 실시
- * 인사업무 공정성 지수 : 전년대비 12% ↑, 청렴문화 지수 10% ↑

② [경상북도] 갑질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

-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성 보장 청렴 챗봇 개설, 고위직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익명성 보장)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실시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 : '21년 17.4% → '23년 10.9%로 감소

③ [광주광역시 복구] 기관 맞춤형 갑질근절 대책 추진

-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및 내부 직원 대상 '반부패 역량진단'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갑질 관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과제로 설정
- 78개 시책에 대한 일몰제 및 불필요한 회의 폐지로 업무 방식 개선
- 내부직원이 체험한 사례를 수집하여 간부공무원이 직접 출연한 영상물 제작·확산, 고위직 주도의 '상급자 식사모시기' 등 관행 개선
- * 내부 구성원 체감도 : 60.3%가 전년대비 낫은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

④ [대한적십자사] 자체적발 부패사건의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

- 병가 사용 부적정 사례를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최근 3년간 휴가 내역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 보완방안 발굴
- * 감사 지적사항 : 위조 진단서를 통해 총 11차례 106일의 허위병가 시행 적발
- * 전수조사 : 총 641명 935건 진단서 진위 확인 및 기관별 병가사용 현황 등 분석
- 간부·직원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 및 인사·복무 관리시스템 개선까지 연계, 개선 과정을 청렴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하여 직원 공감대 형성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개요

○ 평가지표

- (대표사례) 각급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 평가

※ (평가기준 1) 고위직 참여수준, 실질적 노력 투입 정도, 효과성, 독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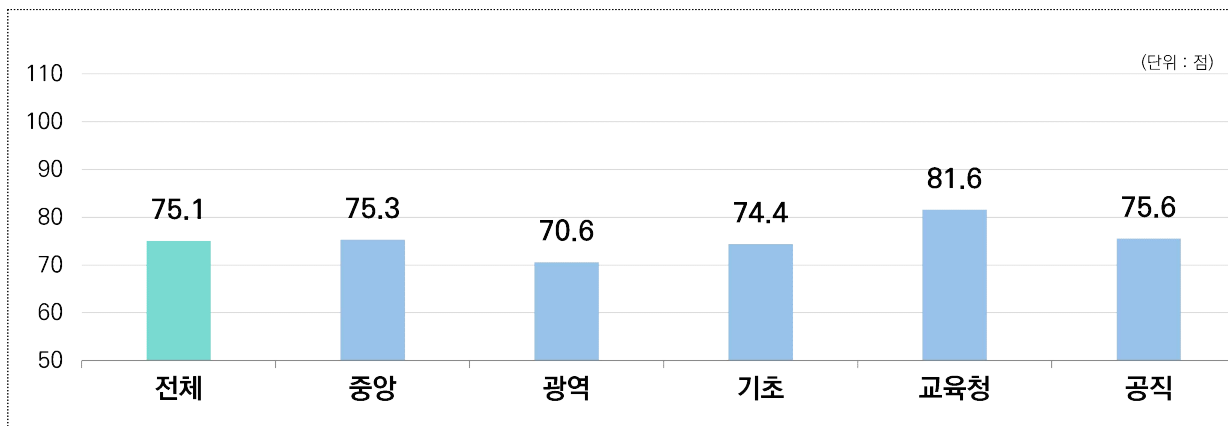
※ (평가기준 2) 대표 사례와 부패 취약분야와의 연계성

○ 평가결과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평균점수는 75.1점

※ 각 유형별(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로 등급화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 기관 유형별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도'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기관장·고위직의 청렴 시책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과 솔선수범 등을 통해 반부패 시책 추진 동력 확보

- 평가 기준에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의 연계성'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분야와 연계한 기관장의 다양한 활동 등을 전개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정성)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5% 이내($p < 0.05$)에 있고 상관계수가 0.4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며, 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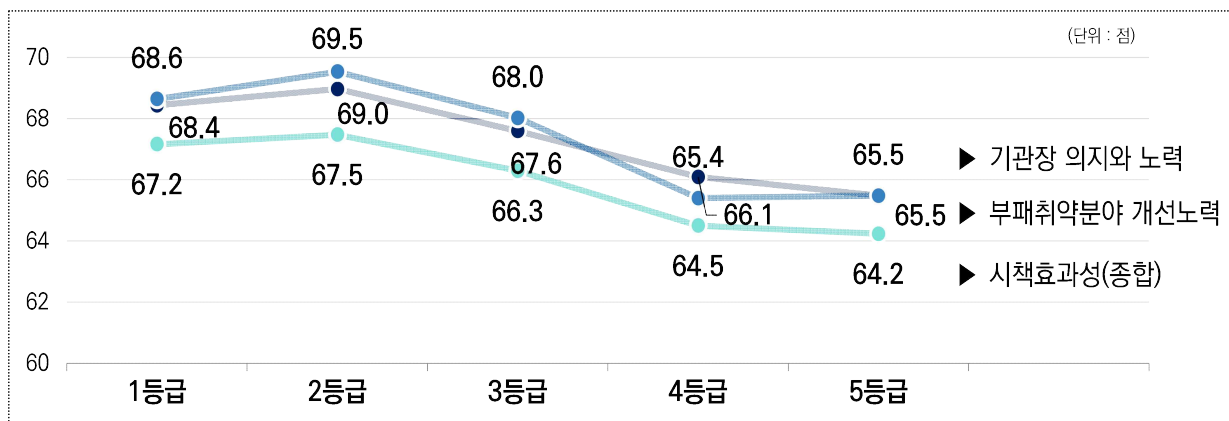
<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 지표(정성)와 종합청렴도 점수간 관계 분석 >

구분		종합청렴도(점)
기관장·고위직 노력 지표(점)	상관계수	0.456
	유의확률	0.000

- 또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정성) 결과가 높을수록 내부 직원들의 시책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

-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의지를 통한 적극적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조직환경과 내부직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기관장 등 관심과 노력도 지표 등급별 청렴수준 인식 >



□ 보완사항

-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수행한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 안내 및 사례 전파

- 기관차원에서 수립한 과제 추진에 대한 성과와 차별화된 실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각급 기관장의 솔선수범 사례 발굴

□ 우수사례

< 부패 통제역량 강화 >

① [기획재정부] 기관장이 참여하는 추진체계 신설

- 부총리 주관 반부패 TF 신설을 통해 청렴시책 수립 및 부패취약 분야 분석, 이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기관장이 직접 주관
- 청렴 전담팀 신설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반부패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내부 통제역량 강화

② [경상북도 경주시] 청렴관련 조직 확대 및 예산 증액 등 인프라 확대

- 체계적인 청렴업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담당 인력 증원(1명) 및 관련 예산 확대
- 반부패 분야 우수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가점, 성과 상여금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

③ [한국조폐공사] 청렴관련 조직 확대 및 예산 증액 등 인프라 확대

- 청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변호사 및 법무실무 담당자 추가 배치 및 관련 예산을 2.4배 증액
-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관리자 승진평가 시 윤리·청렴 관련 가점 신설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활발한 소통

- 기관장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4건의 제도개선을 직접 지시
- 부패취약분야인 회계·예산 관련 전문 인력을 감사실에 증원하여 내부 통제역량 강화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장 주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 장례식장의 금품수수 관행 개선을 위해 기관장의 강력한 개선의지 표명, 병원장 등 산하기관장 면담, 해당분야 직원 간담회 등으로 제도개선 과제(6개) 도출
- 이사장 주관 업무 담당자 특강 실시, 기관장 직통 신고채널 개설, 장례협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 대응체계 개편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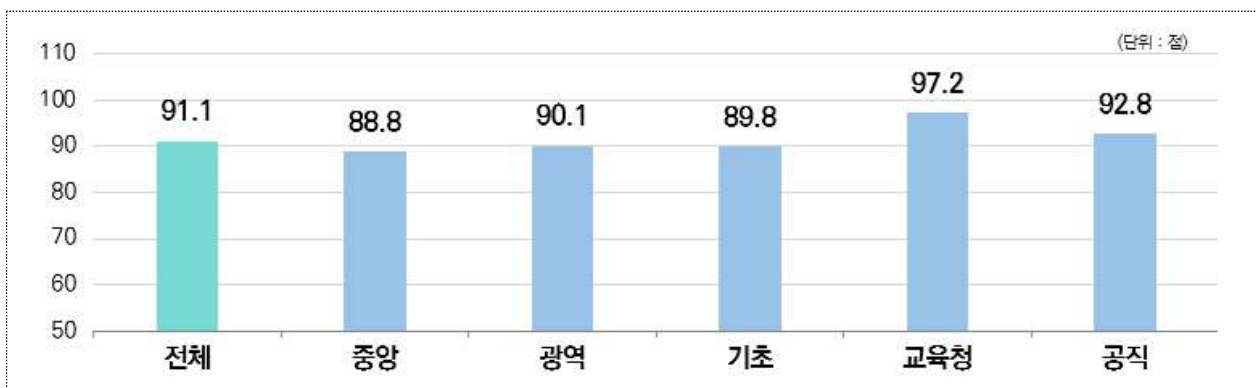
○ 평가지표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각급 기관별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기관 전체 교육이수율,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면교육 이수율 등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

○ 평가결과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91.1점으로, 노력도 전체 평균점수(82.2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97.2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92.8점), 광역자치단체(90.1점) 순이며, 중앙행정기관(88.8점)과 기초자치단체(89.8점)는 평균(91.1점)보다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극적 교육 추진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총 11,327명 중 10,913명(96.3%)이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여 전년 대비 이수율 4.2%p 증가
 - 498개 기관 중 83.1%(414개)는 교육대상 고위직 전원이 이수
 - 올해 평가기준 강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한 공직유관단체 유형도 전체 대상 인원의 97.1%가 교육 이수
- * 고위공직자 범위 : '22년도, 임원급 이상 → '23년도, 처·실장급 이상

< 기관별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

(단위 : 개, 명, %)

구분	기관수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평균 이수율
전체	498	11,327	10,913	96.3	414	48	15	8	13	94.5
중앙	46	1,326	1,232	92.9	36	6	2	1	1	93.7
광역	17	550	528	96.0	11	5	1	0	0	96.5
기초	226	1,911	1,804	94.4	190	19	5	2	10	93.4
교육청	17	1,147	1,141	99.5	15	2	0	0	0	99.5
공직	192	6,393	6,208	97.1	162	16	7	5	2	95.3

-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청렴교육 운영 현황 공개를 통해 청렴교육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
 - 평가 대상기관의 대부분(96.4%, 480개)이 이수 현황 1개월 이상 공개
- ※ (공개내용) 전 직원 교육이수율, 기관장 교육 참석 여부, 대면교육 대상자 (고위직·승진자·신규자) 이수 현황 등

□ 보완사항

- 청렴교육 이수율 저조기관 등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교육 의무제도 안내(교육실적 관리 방법 포함) 추진
 - 특히, 이수율이 낮은 중앙행정기관 유형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추진 병행

□ 우수사례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행

- 고위직 워크숍을 통해 고위직 간부가 담당하고 있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른 부패위험 진단·평가 등 실효적 청렴교육 시행
- 아울러, 갑질근절 행동강령 교육, 내부고발제도 교육 등 공통사항에 대한 교육도 개별 실시하여 반부패·청렴도 문화 확산

② [한국농어촌공사] 권역별 청렴교육 시행

- 전국에 산재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을 권역별(9개)로 구분하여 실시
- 권역별 교육 불참 간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추가 실시

③ [한국국토정보공사]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청렴교육 실시

-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선정된 부패취약 분야 업무 종사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 여부 >

① [표준과학연구원] 청렴교육 관련 정보의 활발한 공개

- 필수로 공개해야 하는 이수현황 정보 외에도 청렴교육 일시와 교육내용, 참석자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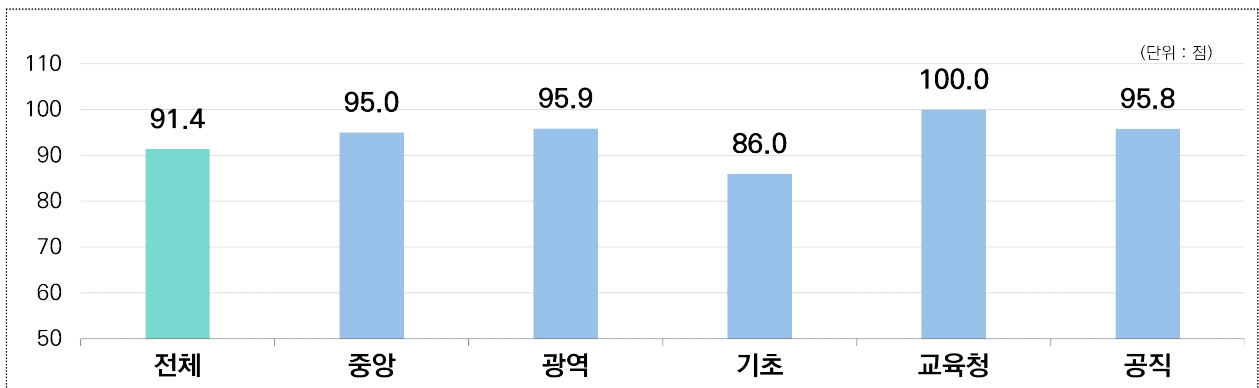
○ 평가지표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부패행위 발생 취약시기에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기관별 운영 현황 자료제출 등 실태 점검 시 협조의무 이행 여부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의 각급기관 자체규정 반영 완료 비율
- (채용분야 일상감사 적용)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상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명시 여부
- (채용과정 검증 강화) 채용 과정에서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화 여부

○ 평가결과

- '부패 유발요인 정비'의 평균점수는 91.4점으로, 청렴노력도 평가 전체 평균점수(82.2점) 보다 높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100.0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 자치단체(95.9점), 공직유관단체(95.8점) 순

< 기관 유형별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자체 점검 강화를 통해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 평가 대상기관의 대부분(95.6%, 476개)이 연간 4회 이상 점검
 - 특히, 올해부터 지표 적용기관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국민생활 접점 영역까지 전방위적 관리

< 기관별 행동강령 자체점검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행동강령 자체점검 횟수				
		6회이상	4~5회	1~3회	미실시	평균
전체	498	199	277	15	7	5.5
중앙	46	16	29	1	0	5.4
광역	17	10	7	0	0	6.2
기초	226	78	128	13	7	5.2
교육청	17	6	11	0	0	5.4
공직	192	89	102	1	0	5.8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시행 2년차인 「이해충돌방지법」 실태 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통한 규범력 확보에 기여
 - 평가 대상기관 중 기초자치단체 5개(1%)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료 제출 완료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반영)** 공공기관의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동력 마련
 - 추진과정 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행정기관 306개 중 65.0%(199개) 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의 모든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반영

- (채용분야 일상감사 규정화) 자체 감사규정 등에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화하여 채용 공정성 강화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대부분(98.4%, 189개 기관)은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규정화
- (채용과정 검증 강화) 채용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 운영토록 각급기관의 관련 규정에 반영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의 90.1%(173개 기관)에서 자체 규정화 완료

< 기관별 공정채용 자체 규정화 실적 >

(단위 : 개, %)

구분	기관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안 반영률					(공직유관단체)	
		100% (31개 조항)	50% 이상	50% 미만	0% (0개)	평균	일상감사 규정화	검증위 규정화
전체	498	199	50	20	37	24.9	189	173
중앙	46	35	9	1	1 (2.2%)	29.2	-	-
광역	17	14	3	0	0	29.8	-	-
기초	226	133	38	19	36 (15.9%)	23.2	-	-
교육청	17	17	0	0	0	31.0	-	-
공직	192	-	-	-	-	-	189 (98.4%)	173 (90.1%)

□ 보완사항

- 국정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화 미실시 기관(37개 기관)에 대해 지속적 이행 독려 필요
 - 필요시, '24년도 지표에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

* **국정과제 91-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채용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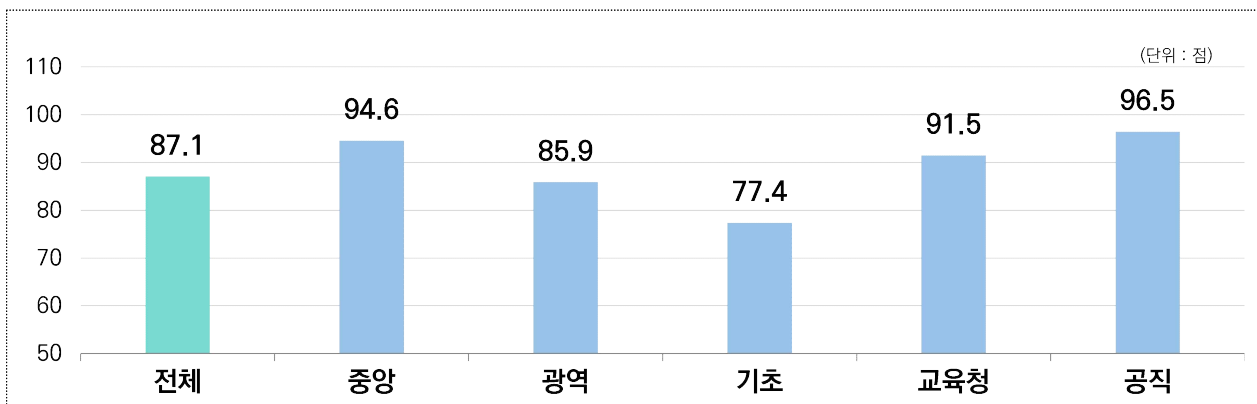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자체점검 실적)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여부
- (이행실태 관리 실적)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기관의 제재처분 사항에 대한 관리 시스템 입력 여부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환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평가

○ 평가결과

-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의 평균점수는 87.1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96.5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94.6점), 교육청(91.5점) 순
- * 각 유형별로 적용 지표가 다르므로 점수의 단순 비교·해석에 유의

< 기관 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지표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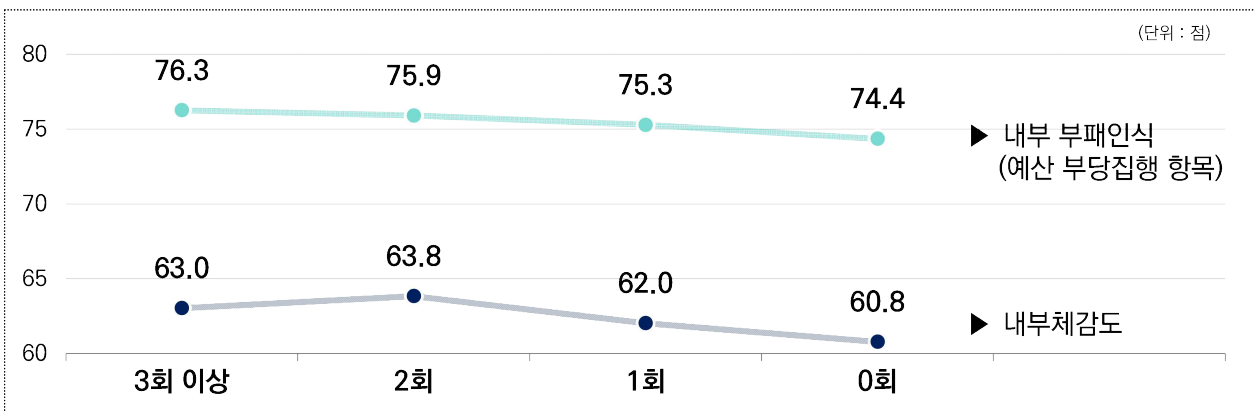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자체점검 실적) 점검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평가 대상기관 대부분(94.0%, 468개)이 연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자체점검 실적이 많은 기관일수록 내부직원이 응답하는 내부 체감도 및 예산 부당집행에 대한 부패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자체점검 횟수별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



○ (이행실태 관리 실적) 제재처분 이행실태 입력 여부 평가로 효율적 재정 누수 현황 파악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발굴

- 평가 대상기간인 306개 기관 중 84.3%(258개 기관)에서 실적을 입력하였고, 48개 기관이 이행실태 관리 실적 미입력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전년대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평가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

- 260개 지자체·교육청 중 51.9%(135개) 기관에서 전년대비 부가금 부과 실적 증가

< 기관별 자체점검 및 부가금 부과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수	자체점검 실적				전년대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3회 이상	1~2회	미실시	평균	12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22 무실적*
전체	498	100	368	30	2.1	113	13	46	69	10	9
중앙	46	8	37	1	2.1	-	-	-	-	-	-
광역	17	6	11	0	2.4	9	0	2	5	1	0
기초	226	52	149	25	2.1	98	12	44	64	7	1
교육청	17	7	10	0	2.9	6	1	0	0	2	8
공직	192	27	161	4	2.1	-	-	-	-	-	-

* '22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실적이 없으나, '23년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실적이 있는 기관

□ 보완사항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지표 발전·보완 필요
 - 특히, 기관 업무 특성상 공공재정지급금이 없는 기관에 대한 효율적 평가지표 운영방안 검토

* 국정과제 5번 실천과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 우수사례

< 자체점검 실적 >

- ①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등 15개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위·변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29건을 적발, 195백만 원을 환수
- ②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공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등 192개 사업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8건을 적발하여 334백만 원 환수
- ③ [의정부시] 사회단체 보조금 등 82개 사업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페이백 등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11건을 적발하여 환수 및 제재 부가금 18백만 원 부과

<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

- 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자체감사 실시
 - 전년 동기 대비 55배 증가한 113백만 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 ② [충남 계룡시] 지방보조금 등 특정감사 실시
 - 전년 동기 대비 124배 증가한 413백만 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7]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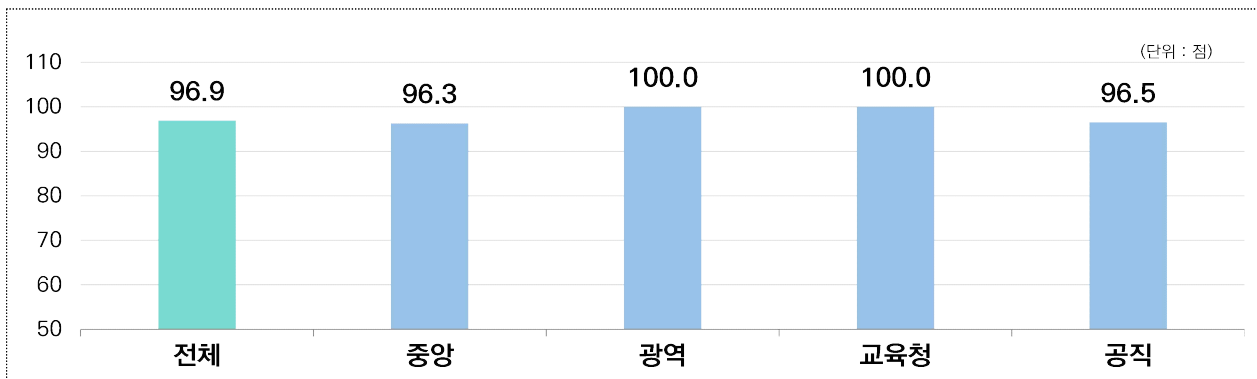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개선 권고 건수 및 기관의 수용 여부, 타 기관 교류활동 등 평가

○ 평가결과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의 평균점수는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96.9점
- 모든 기관 유형에서 95점 이상의 높은 지표 달성률

< 기관 유형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요구·참여, 개선 권고 등을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치함으로써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 272개 기관 중 대부분(96.7%, 263개)이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1회 이상 수용
- 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대부분(98.9%, 269개) 1회 이상 추진

< 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 관련활동 실적 >

(단위 : 개, 회)

구분	기관 수	권고조치 완료건수					타기관 교류활동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평균 횟수	2회 이상	1회	미실시	평균 횟수	
전체	272	107	148	8	9	2.7	82	187	3	1.4	
중앙	46	17	25	3	1	2.6	17	28	1	1.4	
광역	17	7	10	0	0	3.1	5	12	0	1.5	
교육청	17	9	8	0	0	3.3	11	6	0	1.9	
공직	192	74	105	5	8	2.6	49	141	2	1.3	

□ 보완사항

- 각급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시민감사관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부패 분야에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현재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각급기관의 업무특성 등에 따라 반부패 분야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옴부즈만·자문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우수사례

① [교육부] 청렴시민감사관 제안 수용

- 청렴시민감사관의 제안을 수용하여 기관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행동강령 실천매뉴얼 및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제작·보급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안 수용 및 공동 감사 실시

- 청렴시민감사관의 제안을 수용하여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 매뉴얼 개정
- 청렴시민감사관과 공동 감사를 통해 소관 학교들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

(8)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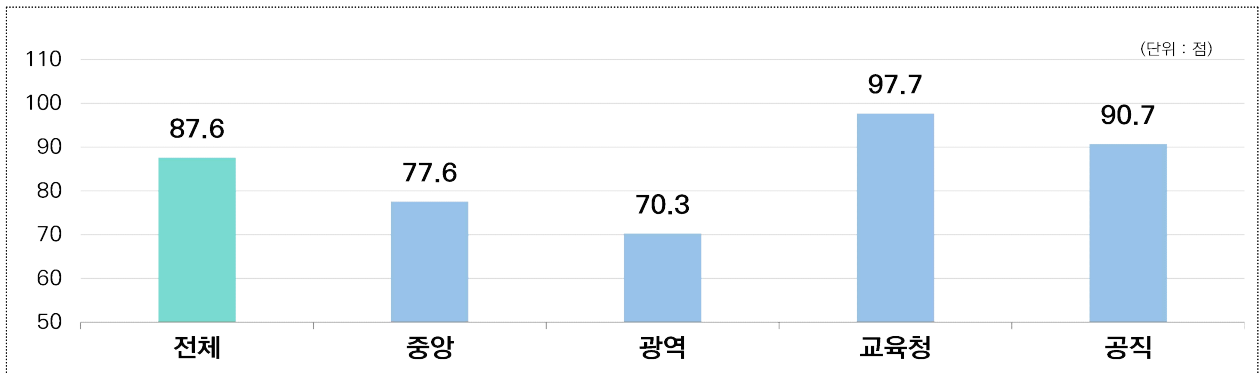
○ 평가지표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평가
- (권고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평가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비율로 평가

○ 평가결과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점수는 87.6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교육청(97.7점)과 공직유관단체(90.7점)의 평가점수가 높은 반면, 중앙행정기관(77.6점)과 광역자치단체(70.3점)는 다소 저조

< 기관 유형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대부분의 기관에서 높은 비율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였으며, 이행기간도 준수
 - 3,356건의 권고사안 중 2,875건(85.7%)을 이행하였고, 절반 이상의 기관(52.0%, 141개)이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 모두 이행

-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97.7%)의 이행률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91.5%), 중앙행정기관(79.2%), 광역자치단체(72.2%) 순

< 기관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

(단위 : 개, 건, %)

구분	기관수	전체 이행률			기관별 이행률					
		권고 건수	이행 건수	이행률	100%	80% 이상	50% 이상	50% 미만	0%	평균
전체	271	3,356	2,875	85.7	141	74	41	15	0	88.6
중앙	46	456	332	72.8	20	7	10	9	0	79.2
광역	17	428	305	71.3	0	7	9	1	0	72.2
교육청	17	81	78	96.3	15	1	1	0	0	97.7
공직	191	2,391	2160	90.3	106	59	21	5	0	91.5

※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하고, 271개 기관에 대해 분석

- (조치기한 준수율) 72개 기관(26.6%)이 모든 권고과제의 조치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1개 기관(63.1%)이 전체 권고과제 중 80% 이상의 과제 조치기한 준수

□ 보완사항

- 기관 규모·업무특성상 제도개선 권고 건수, 이행기간 등의 편차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이므로, 대안 등 마련 검토 필요
 - 제도개선 관련부서 주관 이행 전략회의 및 이행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대체방안 협의 등을 통해 이행 독려 추진

□ 우수사례

①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 이륜차 차대번호 수정 시, 변경사유를 별도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담당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제한

② [한국남부발전] 업무처리 규정 정비

- 소송비용 회수 관련 세부규정을 정비를 통해 소송비용 미회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공정한 소송직무 수행 여건 조성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개요

○ 평가지표

- 공공기관의 다양한 반부패·청렴 관련 정보를 청렴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청렴포털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반부패 정보 포털(<http://www.cle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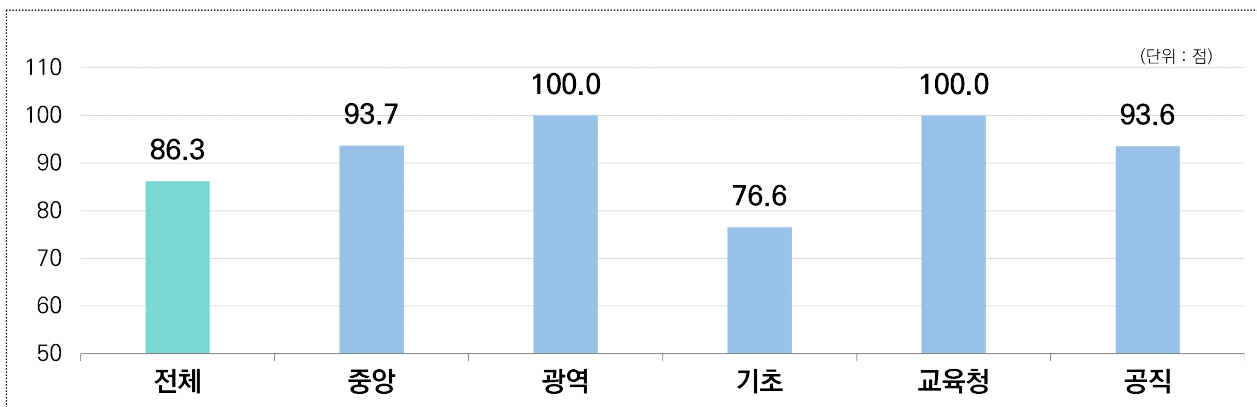
< 주요 정보 공개 사항 >

- ▲ (청렴활동) 각급기관에서 실시한 우수시책,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
- ▲ (각종 부패 관련 신고) 부패·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상담 사례
- ▲ (반부패 분야 지침) 반부패 관련 개정된 각급기관의 지침

○ 평가결과

-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의 평균점수는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86.3점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공직유관단체(100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올해 처음 지표를 적용한 기초자치단체(76.6점)가 가장 미흡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지표 점수 >



□ 주요 성과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기관별 벤치마킹 계기 마련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반부패 정보를 ‘청렴포털’로 일원화하여 반부패 시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각급기관의 청렴활동(2,017건), 기관 부패 신고사례(1,385건), 반부패 관련 지침(450개 기관 672건) 등 실질적인 반부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관별 반부패 정보공개 실적 >

(단위 : 개, %)

구분	기관수	청렴활동 공개		신고사례 공개		반부패개정지침 공개	
		3건 이상 기관수	비율	3건 이상 기관수	비율	1건 이상 기관수	비율
전체	498	443	89.0	397	79.7	445	89.4
중앙	46	44	95.7	41	89.1	44	95.7
광역	17	17	100.0	17	100.0	17	100.0
기초	226	182	80.5	155	68.6	180	79.6
교육청	17	17	100.0	17	100.0	17	100.0
공직	192	183	95.3	167	87.0	187	97.4

□ 보완사항

- 지표 달성률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 관심·독려 필요
 - 다만, 기관의 평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표 적용 여부 검토
- 달성률이 높은 기관유형은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고, 변별력 확보를 위한 지표 개선 검토
 - 단순 게시물 등록 횟수 등 정량적 평가 외에도 우수기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가점 부여 등 방안

□ 우수사례

- ① [국무조정실] 청렴문자 알리미,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청렴활동 공개
- ② [에스알] 자체 모의 상담사례 내용 및 답변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국민 공개·공유
- ③ [경기도교육청] 부패신고 사례 17건과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공개
- ④ [한국마사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채용을 위한 정부지침 및 내부 규정 연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규정 공개

(10-1) 감점지표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 개요

○ 평가지표

- (이첩사건 사후관리)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한 사건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간 내 회신 여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 중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 (신고창구 연결 강화) 부패신고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누리집에 「청렴포털」 상 신고창구 개설·연동 여부 평가

□ 평가결과 · 성과

< 부패신고 관련 미이행 기관 현황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이첩사건 미회신 기관	청탁금지법 부적절 사례 미이행 기관	신고창구 미개설 기관
전체	498	14	0	5
중앙	46	2	0	1
광역	17	2	0	0
기초	226	10	0	2
교육청	17	0	0	0
공직	192	0	0	2

- (이첩사건 사후관리)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한 신고사건의 수사 결과 확인 및 환수 등 조치 완료
 - 179개 기관 3,004건 중 165개 기관(92.2%)에서 2,809건(93.5%)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완료
 - 처리상황을 회신하지 않은 14개 기관에 대해 감점 반영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처리 사례 조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에 기여
 - 부적절 처리사례가 있는 18개 기관(감독기관 11개, 해당기관 7개) 모두 조치 완료
- (신고창구 연결 강화) 각급 기관별 다수의 신고채널을 청렴포털로 연결하여, 표준화된 신고처리 절차 등 기반 마련
 - 493개 기관에서 신고창구 연결 완료, 미실시 5개 기관 감점 반영

□ 보완사항

- 내실있는 부패 신고사건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 각급기관 담당자 안내·교육 등 실시
 - 이첩사건 회신, 청렴포털 연계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절차 등

□ 우수사례

< 이첩사건 사후관리 >

- ① [중소벤처기업부] 총 156건의 사건 전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회신
- ② [산업통상자원부] 총 82건의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회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

- ① [소방청] 산하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산하기관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독려하고 점검 실시
- ② [대구 군위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당일에 즉시 이행하는 등 신속하게 시정 완료

(10-2) 감점지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 개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각급기관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국민권익위가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평가결과·성과

- '22년도 평가결과가 있는 대부분의 기관 (471개 중 448개, 95.1%)에서 평가 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배너·게시물 형태로 기한 내 공개 완료

- 16개 기관에서 일부 지연 공개,
7개 기관에서 미공개



< 결과 공개 세부 내역 >

구분	감점	기관수(개)	세부 기관 분류
① 미공개	-0.50점	7	기초 5, 공직 2,
② 지연 공개 * 최초 공개개시일이 '23.2.10. 이후	-0.25점	16	중앙 4, 광역 2, 기초 10
③ 기한내 공개 * 최초 공개개시일이 '23.2.9. 이전	없음	448	-
④ 전년도 미평가 기관	없음	27	-

□ 보완사항

- 종합청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안내 필요

(10-3) 감점지표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개요

- 신고자 보호환경 조성 및 적극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및 보호결정 이행 여부** 등을 평가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신분보장, 규정 위반자 징계,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 등) 이행 여부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업무협조 여부 등

□ 평가결과·성과

- 평가기간 중 11개 기관의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 등이 있었고, 이 중 2개 기관(기초 1개, 공직유관단체 1개)에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여 감점

< 기관별 부패·공익신고 처리 실적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
		해당없음	전부이행	미이행	
전체	498	487	9	2	-
중앙	46	42	4	0	-
광역	17	16	1	0	-
기초	226	222	3	1	-
교육청	17	17	0	0	-
공직	192	190	1	1	-

□ 주요 미이행 사례

- ① [기초자치단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멤버십 정보가 있는 구매영수증을 가림 처리 없이 모두 보여줌으로써 신고자 정보가 공개되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미조치
- ② [공직유관단체] 계약 관련 불법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관계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하지 않고 단순히 '불문'으로 의결

[11-1] 가점지표 :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 개요

- 종합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우수기관의 멘토링을 지원하여 우수사례 확산 등 공공분야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
 - 미흡기관의 청렴체감도 상승 정도(정량)와 노력도(정성) 평가하여 멘토기관에 가점 차등 부여

□ 평가결과·성과

- (멘티기관) 우수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멘티기관(미흡기관) 24개 중 13개(54.2%)의 종합청렴도 상승
 - 6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 중 4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우수기관으로 거듭남

<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13개)	3단계 ↑	경기 포천시
	2단계 ↑	울산광역시, 강원 동해시, 전북 김제시, 경기 양평군, 서울 노원구
	1단계 ↑	방위사업청, 조달청, 부산 동구, 강원랜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등급 유지 (11개)		강원 강릉시, 강원 속초시,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전남 장흥군, 한국가스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보전원, 경남개발공사

※ '23년도 종합청렴도와 '22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비교

○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멘토링에 참여한 12개 기관 중 9개(75.0%)가 종합청렴도 1·2등급 유지

- 멘토링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상승 수준과 추진노력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중앙행정기관 1개, 광역자치단체 2개, 기초자치단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 보완사항

○ 청렴컨설팅 멘토·멘티를 원하는 수요 대비 국민권익위의 지원 가능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기회 확대 방안 검토 필요

[11-2] 가점지표 :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 개요

-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대면 교육 실시
 - 갑질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에 기관장이 직접 참여 하거나, 기관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 추가 가점(각 +0.1점) 부여

□ 평가결과·성과

- 교육대상 인원 498개 기관 2.5만 명 중 434개 기관(87.1%) 2.1만 명 (82.7%)이 갑질예방 대면 교육에 참여
 - 413개 기관(82.9%)에서는 기관장도 교육에 참여하였고, 212개 기관(42.6%)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강의 실시

< 기관별 갑질 관련 행동강령 교육 이행 실적 >

(단위 : 개, 명, %)

구분	기관수	전체 이수율			기관별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00%	80% 이상	80% 미만	0%	평균
전체	498	25,179	20,816	82.7	95	268	71	64	76.1
중앙	46	3,409	1,992	58.4	4	18	10	14	52.4
광역	17	1,969	1,412	71.7	1	12	4	0	80.1
기초	226	7,719	6,647	86.1	39	117	40	30	74.7
교육청	17	1,618	1,525	94.3	3	13	1	0	93.4
공직	192	10,464	9,240	88.3	48	108	16	20	81.5

□ 보완사항

- 일선 현장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지표와 별도 지표로 운영되어 직원 개인별 이수현황 관리 등에 업무 부담 상존
 - 공공분야 갑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표로 설정하였고, 상당수 기관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대안 마련 검토

□ 우수사례

① [부산광역시] 교육대상 고위공직자 100% 교육 수료

- 교육대상 고위공직자 148명 모두 행동강령 교육을 수료하였고, 기관장이 갑질규정 포함 행동강령 관련 특강 실시

②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장이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체적 사례 등 교육

- 기관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와 기관 업무특성과 연계한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

② [서울교통공사] 교육대상 고위공직자 100% 교육 수료

- 교육대상 고위공직자 56명 모두 행동강령 교육을 수료하였고, 기관장이 기관 특성을 반영한 특강 실시

[11-3] 가점지표 : 적극행정 구현 노력

□ 개요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의견제시 사안에 대해 소관기관의 반영 실적 평가

□ 주요 성과

-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국민권익 보호 구현
 - 각급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142건의 민원·제안을 수용·개선, 총 82개 기관에 가점 부여

< 기관별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실적 >

(단위 : 개, 건)

구분	기관수	전체 반영현황		기관별 반영현황				반영기관 평균건수
		총건수	기관당 평균건수	반영 기관수	3건이상	2건	1건	
전체	498	142	0.3	82	15	7	60	0.6
중앙	46	23	0.5	10	1	1	8	0.4
광역	17	19	1.1	9	3	1	5	0.5
기초	226	48	0.2	41	1	3	37	0.9
교육청	17	32	1.9	12	7	2	3	0.4
공직	192	20	0.1	10	3	0	7	0.5

□ 보완사항

- 기관유형·규모에 따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의 발생 편차가 크고, 민원·제안의 내용이 부패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평가지표 보완 등 검토 추진

※ 대상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총 498개 기관 중 416개 기관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사례 미발생

[12]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 개요

-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이 느끼는 효과성 평가

※ 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⑤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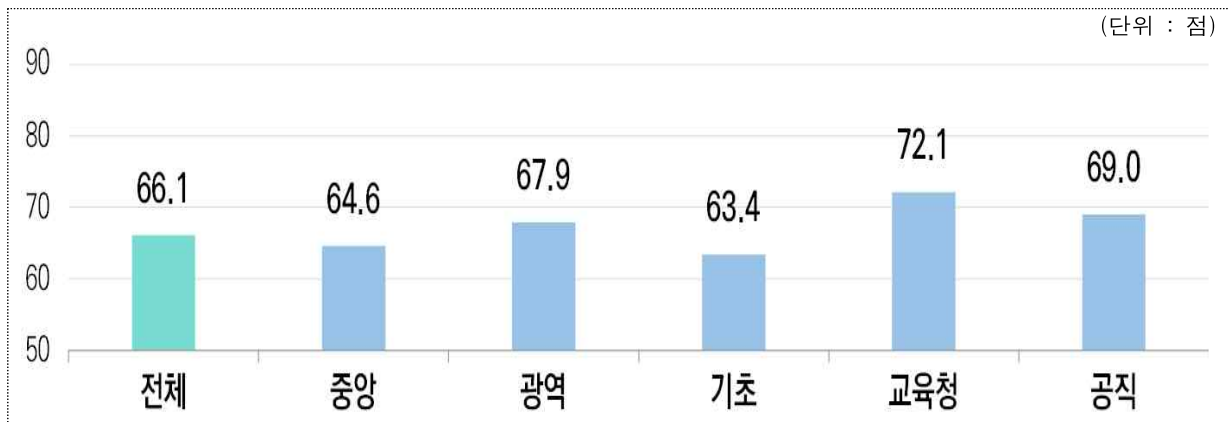
-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 과정에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 실시 후 결과 반영(7점 만점)

※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 평가결과

- (총평)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66.1점으로, 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교육청(72.1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3.4점)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지표 점수 >



- (평가항목별) '청렴교육 이행'의 체감효과성이 68.8점으로 가장 높고, '기관장 노력'이 67.7점, '취약분야 개선'이 67.5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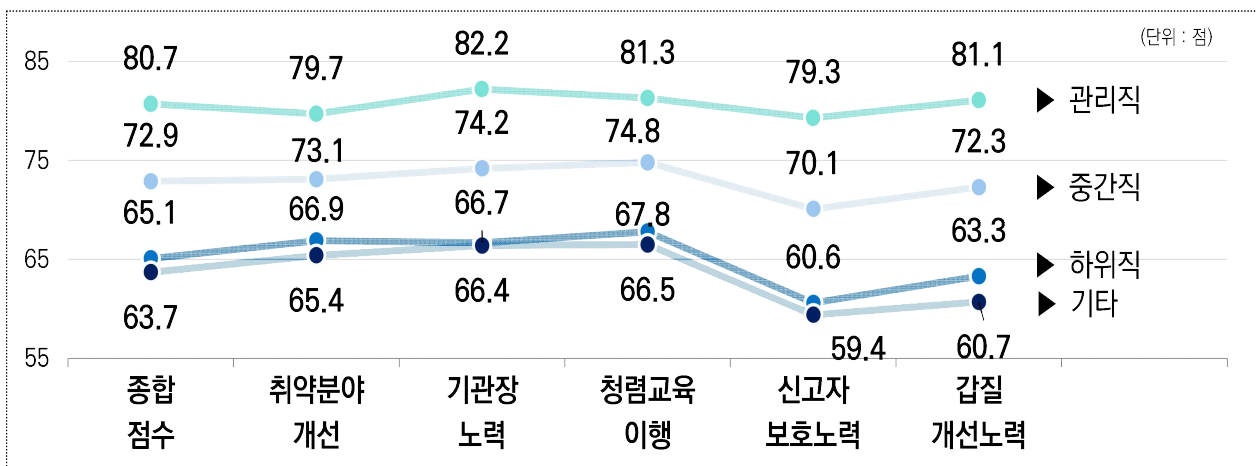
< 시책 효과성 인식 점수 >

(단위 : 점)

구분	시책 효과성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전체	66.1	67.5	67.7	68.8	62.0	64.5
중앙	64.6	65.9	67.1	66.7	60.9	62.3
광역	67.9	69.2	70.2	70.0	63.8	66.2
기초	63.4	64.9	65.2	66.6	59.0	61.1
교육청	72.1	74.2	74.7	74.5	68.0	69.4
공직	69.0	70.2	69.9	71.2	65.2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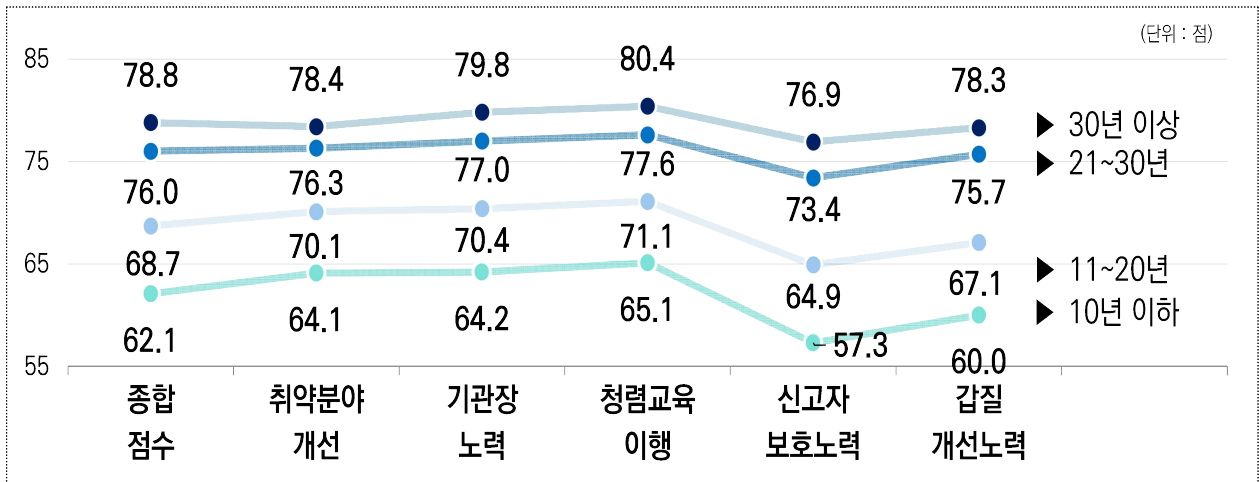
- (직급별) '관리직'의 시책효과성은 80.7점으로 평균(66.1점)보다 높은 수준이나, 하위직(65.1점)과 기타 직렬(63.7점)은 낮게 나타남

< 직급별 시책 효과성 인식 점수 >



- (근무기간별) 근무기간 '10년 이하 공직자'의 시책효과성은 평균 (66.1점) 보다 낮은 수준이며, 직급이 높을수록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가 높음

< 근무년수별 시책효과성 인식 점수 >



□ 보완사항

- 기관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 여건 조성 필요
 - 각급 기관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청렴노력도 지표 운영

3. 반부패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 반부패 분야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에 확산이 필요한 과제를 지표화하고, 이에 따라 각급기관에서는 속도감 있게 이행
 - (국정과제 5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청렴노력도 6번 지표 :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평가대상 공공기관 498개 중 94.0%(468개) 기관에서 연간 1회 이상 점검 이행

✓ 적극적 공공재정 환수·제재부과금 부과

- 260개 지자체·교육청 중 52.0%(135개) 기관에서 전년대비 부과 실적 확대

-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확산

청렴노력도 5번 지표 : 부패 유발요인 정비

✓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각급기관 자체규정화

- 조례 제정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 평가대상 행정기관 306개 중 65.0%(199개) 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모두 자체 규정으로 반영

✓ 채용분야까지 일상감사 적용토록 규정화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98.4%(189개 기관)가 규정 등 개정 완료

✓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채용과정 검증 강화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의 90.1%(173개 기관)에서 자체 규정화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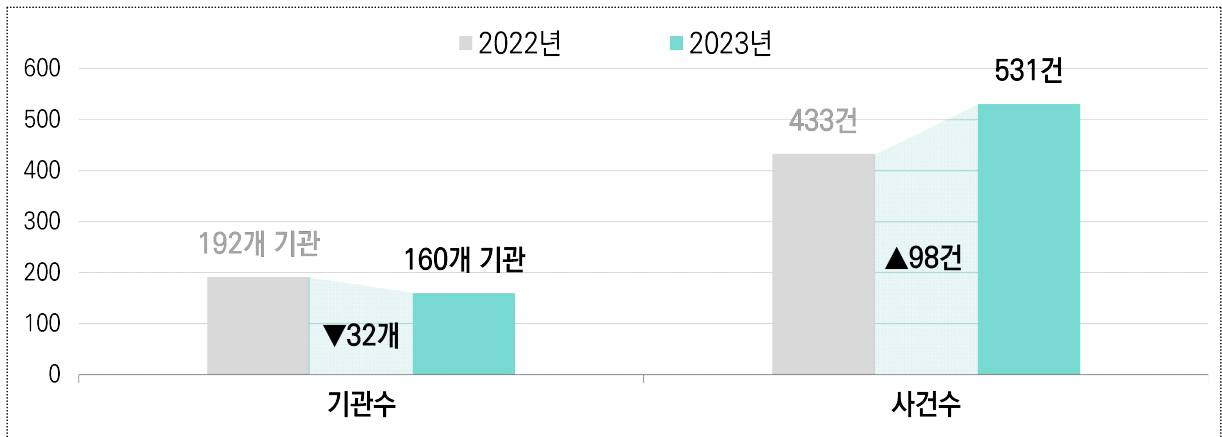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사건 현황

- (발생 현황)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160개 기관(32.1%)의 531건으로, 전년(192개 기관, 433건) 대비 기관수는 감소하였으나, 사건수는 증가

< 전년 대비 부패실태 감점 기관 및 반영 사건수 변동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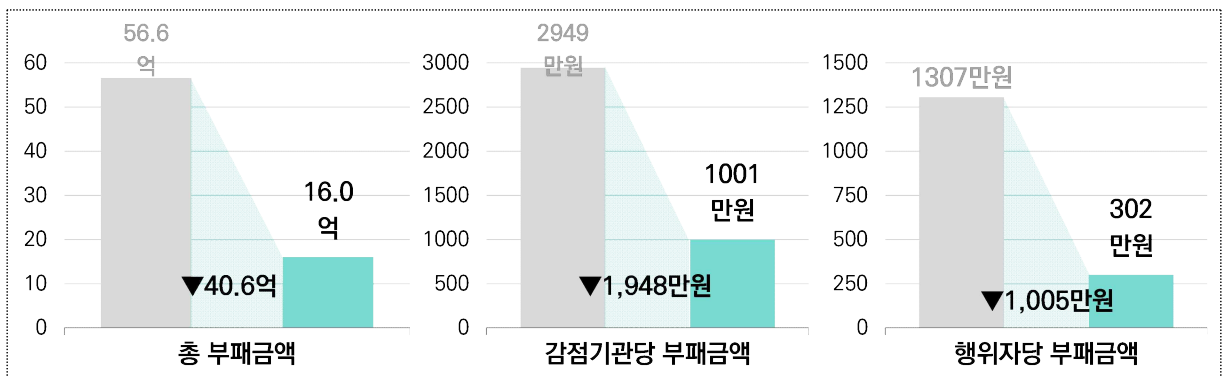


- (금액 규모) 감점 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은 16억 104만원으로, 전년(56.6억) 대비 약 28.3% 수준으로 감소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나타나는 사건 295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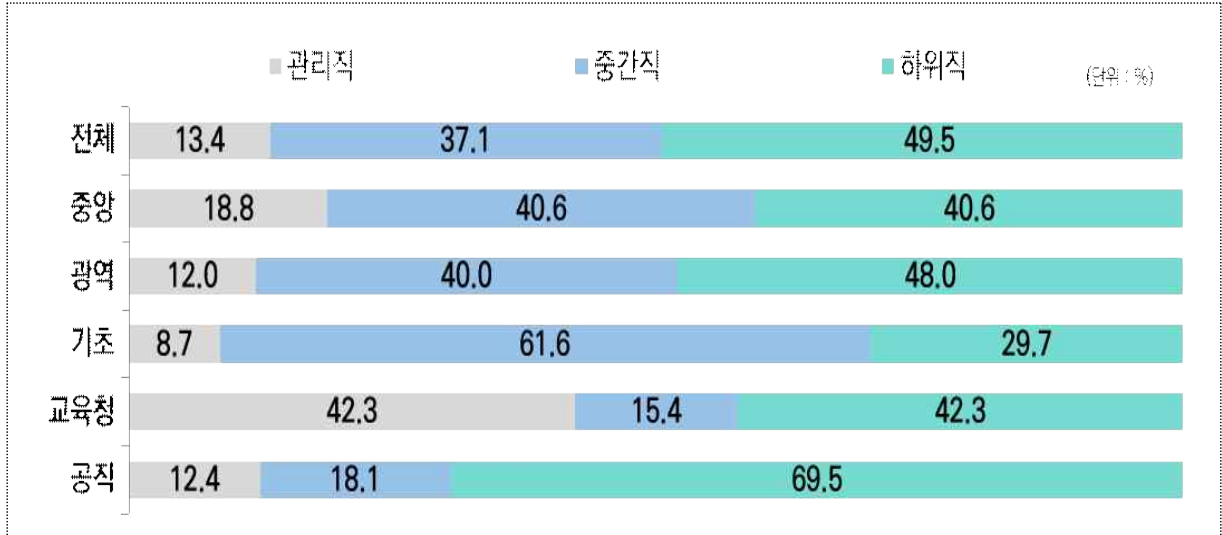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1,001만원(전년의 약 33.9% 수준),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302만원(전년의 약 23.1% 수준)

< 전년 대비 부패금액 규모 변동폭 >



- (직위별) 부패행위자 중 하위직(263건, 49.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직(197건, 37.1%), 관리직(71건, 13.4%) 순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 (기관 유형별)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부패금액 규모는 공직유관단체(1,334만원)가 가장 크고, 중앙행정기관(614만원)이 가장 작음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기초자치단체(427만원)가 가장 크고, 중앙행정기관(187만원)이 가장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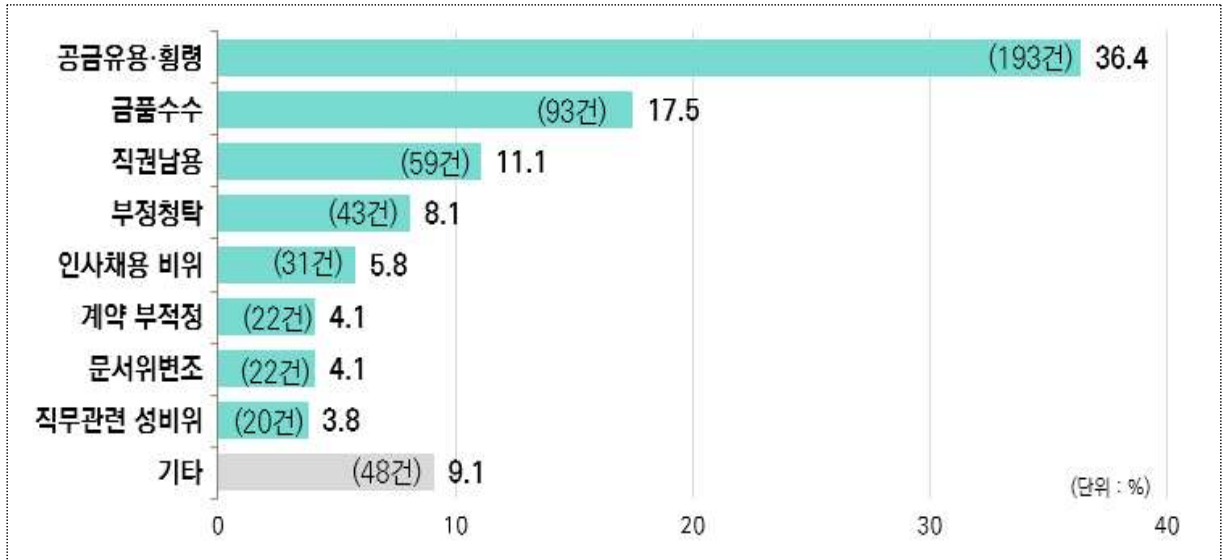
< 감점 대상 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구분	총 금액 (만원)	감점기관 수 (개)	감점기관당 부패금액 (만원)	부패 행위자수 (명)	행위자당 부패금액 (만원)
전체	160,104	160	1,001	531	302
중앙	12,885	21	614	69	187
광역	7,098	8	887	25	284
기초	78,936	84	940	185	427
교육청	9,160	8	1,145	26	352
공직	52,025	39	1,334	226	230

□ 부패행위 내용 분석

- (행위 유형별) 공금유용·횡령(36.4%, 193건), 금품수수(17.5%, 93건), 직권 남용(11.1%, 59건) 등 3가지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65.0% 차지

< 부패유형별 현황 >



- (시계열) 전체 사건 중 ‘인사·채용 관련 비위(전년 대비 -5.7%p)’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공금유용·횡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전년 대비 +14.2%p)

< 전년대비 부패유형별 발생 현황 변동 폭 >

(단위 : %, %p)

구분	계	공금유용·횡령	금품수수	직권남용	부정청탁	인사채용비위	계약부적정	문서위변조	직무관련성비위	기타
'22년	100.0	<u>22.2</u>	16.9	12.5	<u>2.8</u>	11.5	6.0	3.9	5.1	19.1
'23년	100.0	<u>36.4</u>	17.5	11.1	<u>8.1</u>	5.8	4.1	4.1	3.8	9.1
변동 폭	-	<u>+14.2</u>	+0.6	-1.4	<u>+5.3</u>	-5.7	-1.9	+0.2	-1.3	-10.0

- (행위자 직위별) 관리직은 금품수수(32.4%), 중간직도 금품수수(23.9%),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61.2%)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행위자 직위별 부패유형 비율 >

(단위 : %)

구분	계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부정 청탁	인사 채용 비위	계약 부적정	문서 위변조	직무 관련 성비위	기타
전체	100.0	36.4	17.5	11.1	8.1	5.8	4.1	4.1	3.8	9.1
관리직	100.0	7.0	<u>32.4</u>	24.0	10.0	5.6	0.0	7.0	7.0	7.0
중간직	100.0	13.7	<u>23.9</u>	14.7	10.7	10.7	9.6	1.5	3.0	12.2
하위직	100.0	<u>61.2</u>	8.8	5.0	5.7	2.3	1.1	5.3	3.4	7.2

- (기관 유형별)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비율이 높으며, 교육청은 직무관련 성비위, 공직유관 단체는 공금 유용·횡령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부패유형 비율 >

(단위 : %)

구분	계	공금 유용· 횡령	금품 수수	직권 남용	부정 청탁	인사 채용 비위	계약 부적정	문서 위변조	직무 관련 성비위	기타
전체	100.0	36.4	17.5	11.1	8.1	5.8	4.1	4.1	3.8	9.1
중앙	100.0	7.2	<u>34.8</u>	21.8	7.2	5.8	0.0	11.6	5.8	5.8
광역	100.0	8.0	<u>28.0</u>	<u>28.0</u>	8.0	4.0	0.0	0.0	0.0	24.0
기초	100.0	16.7	<u>24.9</u>	13.0	3.8	7.6	10.8	6.5	1.6	15.1
교육청	100.0	7.7	15.4	11.5	7.7	7.7	0.0	7.7	<u>38.5</u>	3.8
공직	100.0	<u>67.7</u>	5.3	4.4	12.0	4.4	0.9	0.0	1.3	4.0

□ 감점 규모 분석

- 160개 기관은 부패공직자로 인해 평균 1.1점 감점 반영
 - 0.5점 미만으로 감점 반영된 기관이 49.4% 차지, 3점 이상 감점을 많이 받은 기관은 18개 기관(11.2%)

< 감점 규모별 기관 분포표 >

구분	계	0.1~0.4	0.5~0.9	1~1.9	2~2.9	3~4.9	5~10
기관 수(개)	160	79	28	21	14	13	5
비율(%)	100.0	49.4	17.5	13.1	8.8	8.1	3.1

- 전체 평가 대상 기관 대비 부패사건 감점 적용기관 비율(32.1%)은 전년(38.3%) 대비 6.2%p 감소
 - 감점 적용기관당 평균 부패사건 수는 3.3건, 감점은 1.1점(전체 기관 기준 0.4점)으로 평균 사건 수는 증가(+1.0건)하였으나, 감점 규모는 감소(-1.2점)

< 전년 대비 부패실태 감점 규모 변화 폭 >

구분	전체 기관수 (개)	감점 기관수 (개)	감점 적용기관 비율 (%)	전체 부패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감점 (점)
'22년	501	192	38.3	433	2.3	2.3
'23년	498	160	32.1	531	3.3	1.1
변화 폭	-3	-32	-6.2%p	+98	+1.0	-1.2

※ 전년도와 감점 적용 방식이 달라져 감점규모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
 ('22년) 정량감점(최대 10점) + 정성감점(최대 5점)
 ('23년) 정량감점(최대 5점) + 정성감점(최대 5점)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이 가장 큰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1.5점), 가장 작은 유형은 기초자치단체(-1.0점)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47.1%)이 가장 높고, 공직유관단체(20.3%)가 가장 낮은 수준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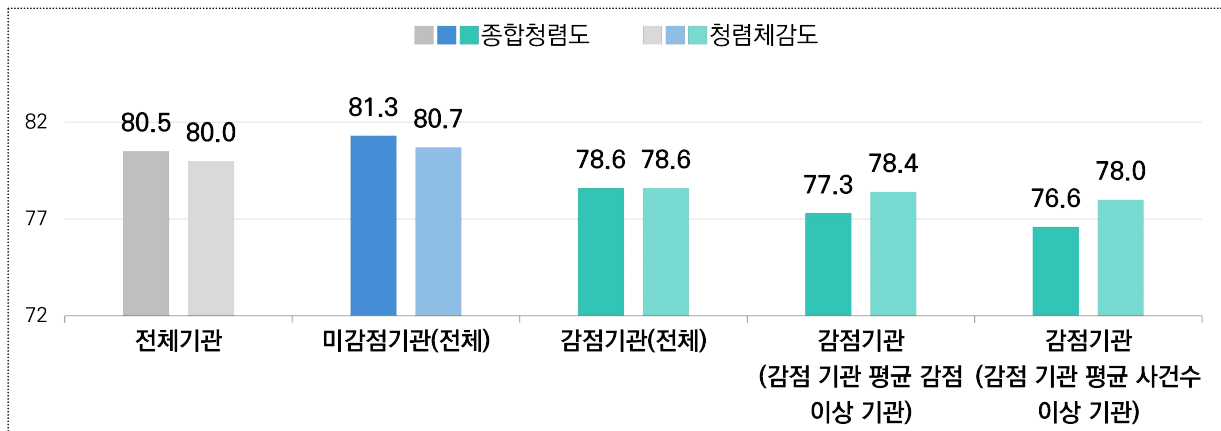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기관수 (개)	감점 기관수 (개)	발생률 (%)	전체 부패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사건수 (건)	감점기관당 평균감점 (점)
전체	498	160	32.1	531	3.3	1.1
중앙	46	21	45.7	69	3.3	1.5
광역	17	8	47.1	25	3.1	1.2
기초	226	84	37.2	185	2.2	1.0
교육청	17	8	47.1	26	3.3	1.4
공직	192	39	20.3	226	5.8	1.3

□ 감점 여부와 청렴도간 관계 분석

-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감점 기관의 평균은 78.6점(전체 기관 종합청렴도 대비 -1.9점)으로 감점이 없는 기관의 평균(81.3점)보다 낮게 나타남
- (청렴체감도) 체감도 점수에서도 부패실태 감점 기관의 평균(78.6점)이 전체기관 평균(80.0점)과 감점이 없는 기관 평균(80.7점)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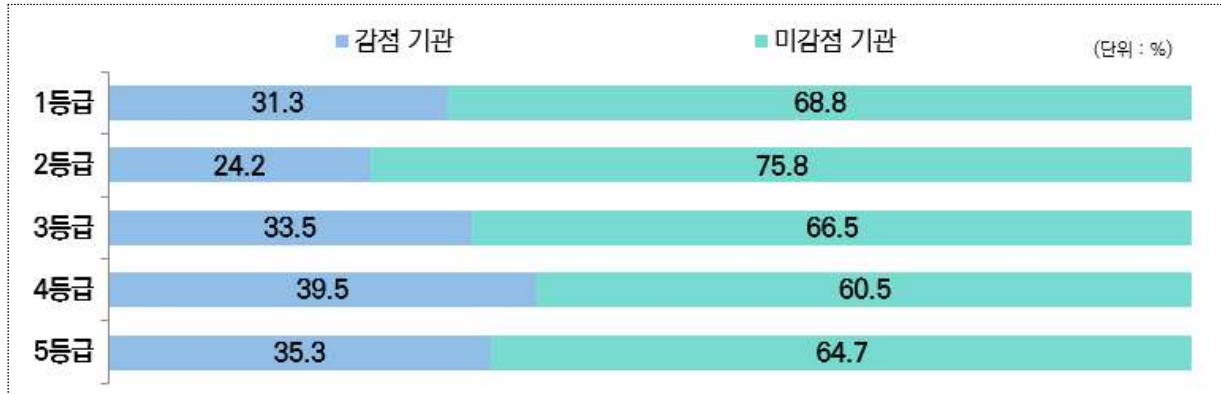
< 감점 여부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비교 >

(단위 : 점)



- (등급별 분석) 1~2등급 기관 대비 3~5등급 그룹에서 감점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4등급 기관 중 감점 기관수의 비율은 39.5%로 타 등급 대비 감점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종합청렴도 등급별 감점기관 비율 >



VI. 심층 분석

1. 평가영역·항목별 관계

〈 분석 배경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개편 2년차를 맞아 각 평가 영역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관의 노력도와 체감 수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아지는 강한 상관관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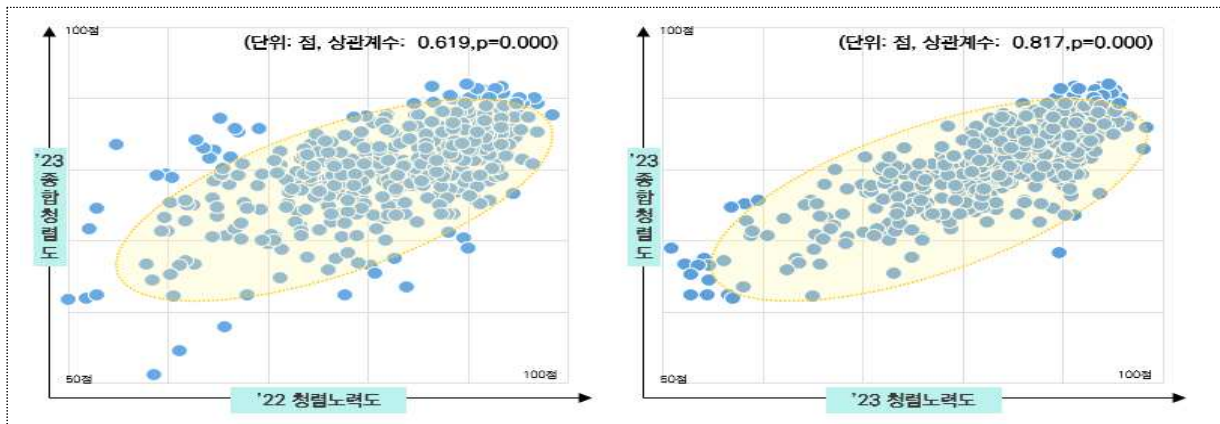
- (상관관계 분석) '23년 청렴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23년 종합청렴도 점수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남
- (효과 지속성) '22년 청렴노력도 점수가 높았던 기관일수록 '23년 종합청렴도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반부패 시책 노력의 효과가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

〈 청렴노력도('22~'23년)와 종합청렴도('23년)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구분		청렴노력도	
		'22년	'23년
'23년 종합청렴도	상관계수	0.619	0.817
	유의확률	0.000	0.000

※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5% 이내($p < 0.05$)에 있을 때, 상관계수 0.6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 0.8 이상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

〈 청렴노력도('22년, '23년)와 종합청렴도('23년)간 상관관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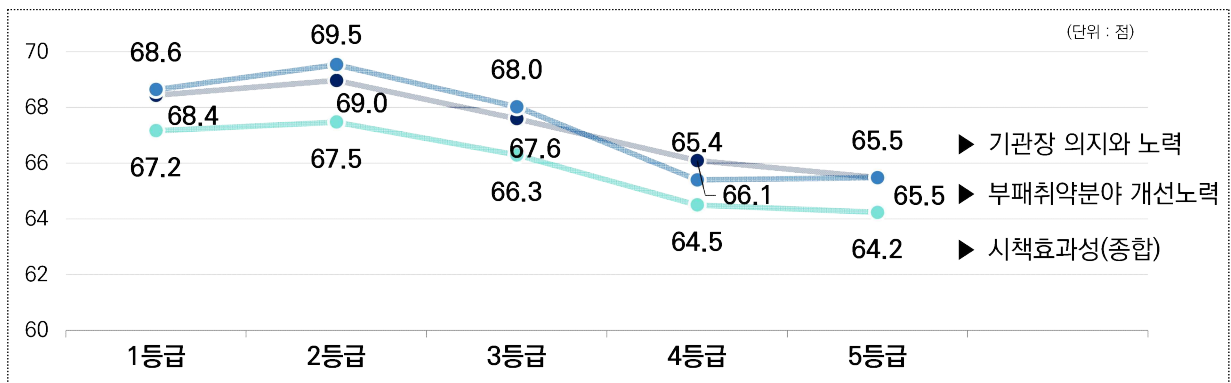
□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청렴수준 전반에 영향

○ (시책효과성)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부 직원들이 체감하는 시책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점수가 높은 그룹이 ‘시책효과성’ 점수도 높은 경향

-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의지를 통한 적극적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조직환경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

<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등급별 시책효과성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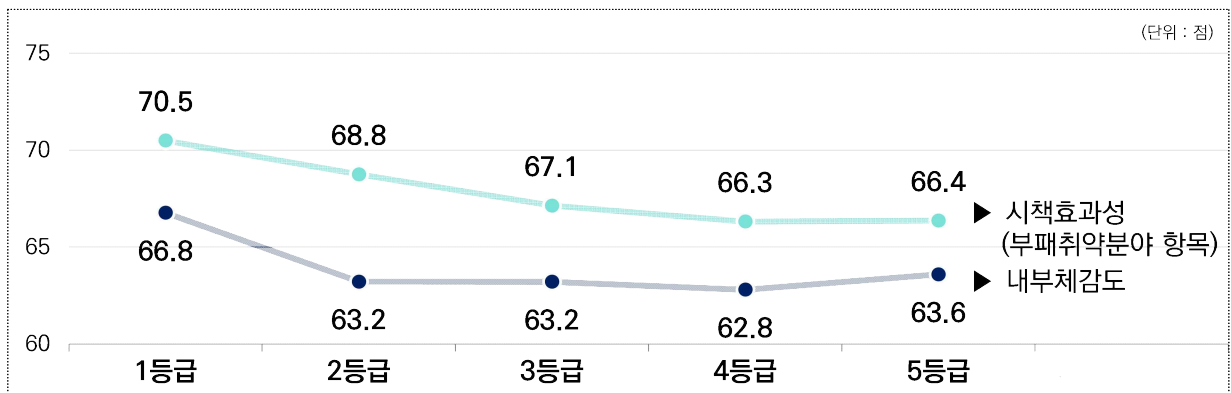


□ 취약분야 개선 노력으로 실질적 효과 체감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지표의 점수가 높은 기관은 시책효과성 평가(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체감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

- 올해 평가 비중이 강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통해 각급기관의 업무·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자율적 시책 추진 환경 조성 효과

<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지표의 등급별 시책효과성·내부체감도 비교 >



□ **청렴컨설팅을 통한 청렴수준 향상 효과**

- (시너지 효과) 기관특성·업무성격 등이 유사한 기관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효과

※ 청렴컨설팅 : 청렴도 저조기관(4~5등급, 멘티)과 우수기관(1~2등급, 멘토)간 그룹멘토링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멘티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고 멘토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지원 정책

- (멘토) '23년도 청렴컨설팅에 멘토('22년도 종합청렴도 1·2등급)로 참여한 12개 기관 중 9개 기관(75.0%)이 '23년도 종합청렴도 1·2등급 유지
- (멘티) '23년도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4개 멘티기관 중 13개 기관(54.2%)의 종합청렴도 개선 효과

< '23년도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
		3개 등급	2개 등급	1개 등급		
기관 수	24	1	5	7	11	0
비율	100.0	4.2	20.8	29.2	45.8	0.0

- (지속적 효과) '22년도 멘티 기관 중 65.2%가 '21년 대비 '23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여 청렴컨설팅의 효과가 2년차에도 지속

< '22년도 청렴컨설팅 멘티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변동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전체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
		3개 등급	2개 등급	1개 등급		
기관 수	23	5	4	6	7	1
비율	100.0	21.7	17.4	26.1	30.4	4.4

※ '22년도에 종합청렴도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2년도 컨설팅의 효과는 '21년 청렴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

2. 업무투명 수준과 청렴수준간 관계

< 분석 배경 >

올해 새롭게 도입한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측정항목인 '업무투명' 항목이 부패인식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어, 이에 대한 다각적 분석 실시

□ 민원인이 체감한 업무투명 수준이 각 등급에 유의한 영향

-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의 각 등급간 비교 분석 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업무투명' 항목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등급과 외부체감도 '업무투명' 항목의 점수 경향 >



□ 업무투명 높을수록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현저히 감소

- 업무투명 항목의 부패인식 점수가 95점 이상인 기관은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이 0.0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업무투명 점수와 외부 체감도 경험률간 관계 >

(단위 : %)

구분	외부체감도 '업무투명' 항목 점수					
	전체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미만	85점 미만	80점 미만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0.42	<u>0.05</u>	0.13	0.42	0.53	<u>0.74</u>

□ 외부체감도 측정 항목 상호간 광범위한 상관관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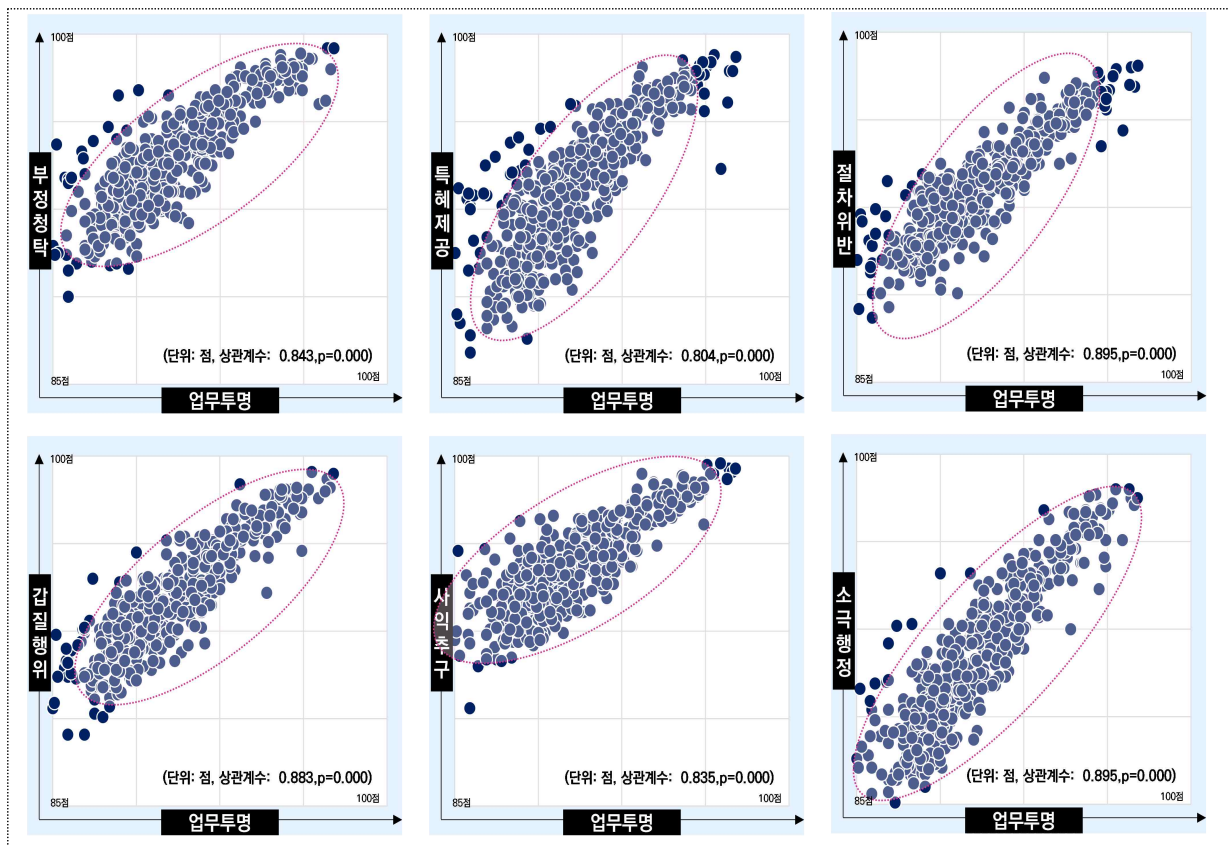
- ‘업무투명’ 항목과 외부체감도의 모든 부패인식 측정 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0.8 이상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
-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부정청탁, 특혜제공, 사익추구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외부체감도 ‘업무투명’ 항목과 타 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

구분		부정청탁	특혜제공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업무투명	상관계수	0.843	0.804	0.895	0.883	0.835	0.895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5% 이내($p < 0.05$)에 있고 상관계수가 0.4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며, 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

< 외부체감도 ‘업무투명’ 항목과 타 항목간 상관관계 분포 >



3. 외부·내부 부패경험 세부 분석

< 분석 배경 >

공공기관 내·외부 업무경험자들이 응답한 부패경험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부패 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업무범위별 세부 분석 등 실시

□ 전년 대비 외부 부패경험률 악화, 내부 부패경험률 개선

○ 외부 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0.11%p 늘었고, 내부 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0.1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외부 부패경험률은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며, 내부 부패경험률은 향응·편의와 함께 채용 등 사적이익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채용 등 사적이익’ 항목은 채무면제, 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제공 의미 포괄

< 전년대비 외부·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

(단위 : %, %p)

구분	계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22년	0.31	0.13	0.10	0.11	0.05	0.04
	'23년	0.42	<u>0.15</u>	<u>0.14</u>	<u>0.18</u>	0.08	0.06
	비교	+ 0.11	+ 0.02	+ 0.04	+ 0.07	+ 0.03	+ 0.02
내부	'22년	2.11	0.62	0.82	1.18	0.38	-
	'23년	1.99	0.56	<u>0.67</u>	<u>1.01</u>	<u>0.67</u>	-
	비교	- 0.12	- 0.06	- 0.15	- 0.17	+ 0.29	+ 0.01

※ ‘운동부 불법찬조금’ 항목은 외부체감도(교육청 한정)에서만 측정

□ 내부 업무의 ‘편의 제공’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음

○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보다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약 4.7배 더 많고, 모든 항목에서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더 높음

※ 외부·내부체감도의 측정영역·측정대상이 다르기에 직접적 비교는 한계가 있음

- 외부·내부체감도간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항목은 '채용 등 사적이익'으로 약 8.4배 차이

※ '운동부 불법찬조금'의 경우 교육청 유형의 외부체감도 항목으로만 측정함에 따라 비교대상에서 제외

< 외부·내부체감도간 부패경험률 차이 >

(단위 : %)

구분	부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정보	운동부 불법찬조금
외부	0.42	0.15	0.14	0.18	0.08	0.06	0.03
내부	1.99	0.56	0.67	1.01	0.67	0.15	-
차이	4.7배	3.7배	4.8배	5.6배	8.4배	2.5배	-

□ 외부 부패경험은 광역, 내부 부패경험은 기초자치단체 취약

- 외부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광역(0.68%), 내부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기초(2.40%)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패경험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교육청 유형은 타 항목 대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운동부 불법찬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을 제외하고 비교

< 기관유형별 외부·내부 부패경험 >

(단위 : %, 회)

분류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경험률	경험빈도	경험률	경험빈도
전체	0.42	0.009	1.99	0.048
중앙행정기관	0.29	0.007	1.97	0.049
광역자치단체	0.68	0.015	1.60	0.040
기초자치단체	0.51	0.011	2.40	0.057
교육청	0.73	0.017	1.31	0.028
공직유관단체	0.18	0.004	1.78	0.045

□ 외부 부패경험률 최대 2.93%, 내부 부패경험률 최대 10.20%까지 나타나

○ 498개 기관 중 5개 기관(전체 기관의 1.0%)에서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장 높게 나타난 기관은 2.93% 수준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5개 기관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분포

< 기관유형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률 분포표 >

(단위 : %)

구분	계	2% 이상	1.5% 이상	1.0% 이상	0.5% 이상	0.5% 미만	0%
전체 (498개)	100.0	1.0	1.8	7.8	21.3	22.9	45.2
중앙 (46개)	100.0	0.0	0.0	2.2	21.7	19.6	56.5
광역 (17개)	100.0	0.0	0.0	29.4	23.5	35.3	11.8
기초 (226개)	100.0	2.2	2.7	12.8	25.2	28.8	28.3
교육청 (17개)	100.0	0.0	5.9	5.9	70.6	17.6	0.0
공직 (192개)	100.0	0.0	1.0	1.6	12.0	16.1	69.3

※ 교육청 유형은 타 항목 대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는 '운동부 불법찬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고려 필요

○ 498개 기관 중 31개 기관(전체 기관의 6.2%)에서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가장 높게 나타난 기관은 10.20% 수준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31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4개), 기초자치단체(19개), 공직유관단체(8개)에서 분포

< 기관유형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률 분포표 >

(단위 : %)

구분	계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0%
전체 (498개)	100.0	6.2	4.8	11.2	20.7	26.9	15.5	14.7
중앙 (46개)	100.0	8.7	6.5	6.5	21.7	30.4	8.7	17.4
광역 (17개)	100.0	0.0	5.9	0.0	11.8	64.7	11.8	5.9
기초 (226개)	100.0	8.4	5.3	16.4	20.4	21.2	16.8	11.5
교육청 (17개)	100.0	0.0	0.0	0.0	23.5	41.2	23.5	11.8
공직 (192개)	100.0	4.2	4.2	8.3	21.4	28.1	15.1	18.8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업무에 대한 부패경험률 악화

-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체감도 측정 업무 중,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에서의 부패경험률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된 업무는 '보조금 지원 (0.54%, 전년 대비 +0.45%p)' 업무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경험률 비교 >

(단위 : %, %p)

구분	2022	2023	변화
광역자치단체 측정업무 전체	0.45	0.68	▲0.23
공사관리 및 감독	0.77	<u>1.02</u>	▲0.25
용역관리 및 감독	0.53	0.62	▲0.09
보조금 지원	0.09	0.54	▲ <u>0.45</u>
민원업무	0.19	0.42	▲0.23

- 기초자치단체의 외부체감도 측정 업무 중, '재·세정' 업무에서의 부패경험률이 0.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악화된 업무는 '보조금 지원 (0.57%, 전년 대비 +0.33%p)' 업무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경험률 비교 >

(단위 : %, %p)

구분	2022	2023	변화
기초자치단체 측정업무 전체	0.35	0.51	▲0.16
재·세정	0.31	<u>0.62</u>	▲0.31
보조금 지원	0.24	<u>0.57</u>	▲ <u>0.33</u>
인허가	0.35	0.54	▲0.19
계약 및 관리	0.39	0.46	▲0.07

□ **부패경험이 있는 기관의 종합청렴도·체감도 점수 더 낮아**

- 외부·내부 부패경험 유무에 따라 종합청렴도·체감도 점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별 종합청렴도·체감도 점수 차이 >

(단위 : 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있음(273개)	77.8	76.6	82.5
부패경험 없음(225개)	83.7	84.1	92.5
비교	-5.9	-7.5	-10.0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별 종합청렴도·체감도 점수 차이 >

(단위 : 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있음(425개)	80.1	79.5	61.8
부패경험 없음(73개)	82.6	82.7	72.4
비교	-2.5	-3.2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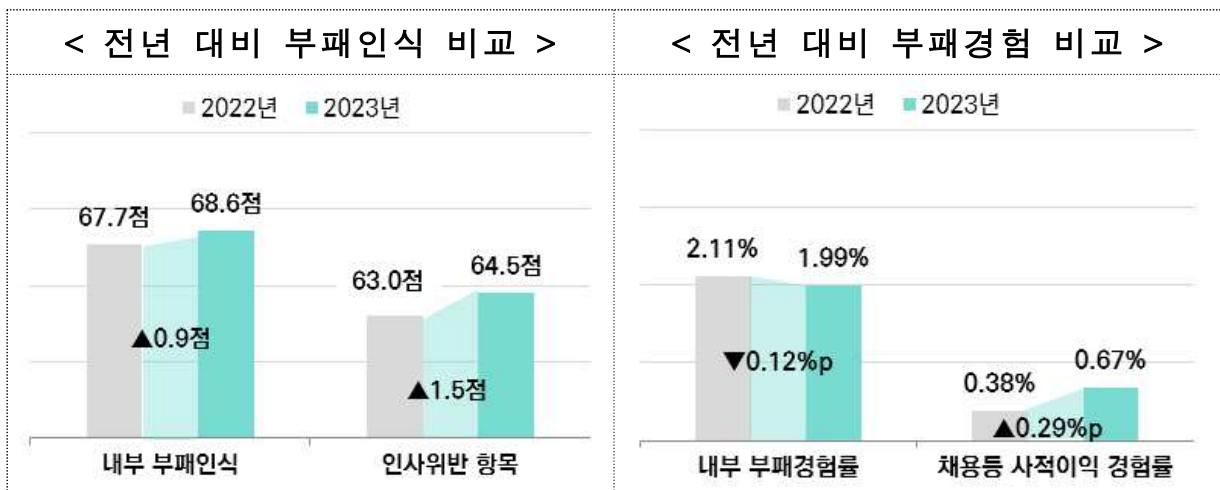
4. 인사 운영·채용 분야 세부 분석

< 분석 배경 >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결과, 부패실태 감점 현황, 채용비리 적발 기관에 대한 세부
 분석 등을 통해 인사 운영 및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인사 공정성에 관한 부패인식 저조, 부패경험 증가

- (인식) 기관 내부 구성원들의 ‘인사위반’ 항목의 부패인식(64.5점)은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68.6점) 대비 낮은 수준이나,
 - (시계열) ‘인사위반’ 항목의 부패인식은 전년대비 1.5점 상승하여,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평균의 상승폭(+0.9점)보다 크게 개선
 - (경험) 기관 내부 구성원들의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경험률(0.67%)은 내부체감도 전체 부패경험률(1.99%)보다 낮으나,
 - (시계열) 내부체감도 전체 부패경험률이 전년 대비 줄어든(-0.12%p) 반면,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경험률은 크게 늘어남(+0.29%p)
- ※ 금품(-0.06%p)·향응(-0.15%p)·편의(-0.17%p) 제공 항목의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감소
 ※ ‘채무면제·채용청탁 등 사적이익’ 경험률은 채용청탁을 포함한 채무면제 등 사적이익을 포괄한 경험에 대한 응답임에 유의



□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인사 공정성 인식 저조

- (근무기간별) 근무기간 10년 이하의 '인사위반'에 대한 부패인식(63.8점)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개선(+1.7점)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 >

(단위 : 점)

근무기간별	2022년		2023년		차이	
	부패인식	인사위반	부패인식	인사위반	부패인식	인사위반
전체	67.7	63.0	68.6	64.5	▲0.9	▲1.5
10년 이하	65.7	62.1	66.7	<u>63.8</u>	▲1.0	▲1.7
11~20년	68.8	64.2	69.9	65.4	▲1.1	▲1.2
21~30년	73.7	68.1	74.9	69.6	▲1.2	▲1.5
31년 이상	75.6	69.3	76.7	70.6	▲1.1	▲1.3

- (직급별) 하위직에서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부패인식(64.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직급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 >

(단위 : 점)

직급별	2022년		2023년		차이	
	부패인식	인사위반	부패인식	인사위반	부패인식	인사위반
전체	67.7	63.0	68.6	64.5	▲0.9	▲1.5
관리직	79.4	74.4	80.1	75.4	▲0.7	▲1.0
중간직	71.1	64.6	72.3	66.1	▲1.2	▲1.5
하위직	67.1	62.7	68.0	<u>64.1</u>	▲0.9	▲1.4
기타 (공무직 등)	67.1	66.3	68.4	68.1	▲1.3	▲1.8

□ **공정채용 제도화가 이루어질수록 청렴체감도 개선**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토대로 각급 기관에서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채용의 사각지대 해소

※ 평가 대상 행정기관 306개 중 65.0% 기관에서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국민권익위 권고 표준안, 31개 조항, '23.3월)을 모두 자체 규정으로 반영

< 행정기관별 공정채용 자체 규정화 실적 >

(단위 : 개, %)

구분	전체 (비율)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계	306 (100.0)	46	17	226	17
100% 반영 (31개 조항)	199 (65.0)	35	14	133	17
50% 이상 반영 (16개 조항 이상)	50 (16.3)	9	3	38	0
50% 미만 반영 (15개 조항 이하)	20 (6.5)	1	0	19	0
0% (미반영)	37 (12.1)	1	0	36	0

- (체감도와 관계) 비공무원 채용 기준을 자체 규정으로 모두 반영한 그룹에서 내부체감도 점수, '인사위반' 항목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정채용 지표 실적과 청렴체감도 비교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 수	청렴체감도 점수	
		내부 체감도	'인사위반' 항목
계	306	60.9	61.7
100% 반영 (31개 조항)	199	61.4	62.4
50% 이상 반영 (16개 조항 이상)	50	58.9	59.9
50% 미만 반영 (15개 조항 이하)	20	60.0	60.9
0% (미반영)	37	60.8	60.8

- (공직유관단체)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정례화하고, 채용 과정에 독립적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채용비리 발생 차단

※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 규정화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의 98.4% 완료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설치·운영 : 평가대상 공직유관단체의 90.1% 완료

<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자체 규정화 실적 >

(단위 : 개, %)

구분	전체	일상감사 규정화	검증위 규정화
기관 수	192	189	173
비율	100.0	98.4	90.1

- (체감도와 관계) 감사범위 정례화와 독립위원회 설치를 모두 반영한 그룹에서 내부체감도 점수, '인사위반' 항목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정채용 지표 실적과 청렴체감도 비교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 수	청렴체감도 점수	
		내부 체감도	'인사위반' 항목
전체	192	67.3	68.9
모두 반영	172	67.4	69.0
1개 반영	18	66.6	68.3
미반영	2	65.3	67.0

□ 채용비리 발생한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 수준 특히 저조

-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된 56개 기관(위반사례 총 129건)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미적발기관 대비 낮은 수준

- 내부체감도의 '인사공정'과 외부체감도의 '업무투명' 항목 특히 저조

※ '2023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국민권익위, '23.12월)'를 참고하여 분석

< 채용비리 적발 여부별 청렴수준 비교 >

(단위 : 개, 점)

구분	기관 수	종합 청렴도 점수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외부 체감도	업무투명 항목	절차위반 항목	내부 체감도	인사공정 항목
적발기관	56	84.1	89.9	87.4	91.8	66.8	67.5
미적발기관	109	85.2	91.8	89.4	93.2	67.3	69.6
비교	-	-1.1	-2.0	<u>-2.0</u>	-1.3	-0.5	<u>-2.2</u>

※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인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27개는 국민권익위의 ‘2023 채용비리 전수조사’ 대상에 미해당

□ 인사채용 비위로 인한 부패실태 감점 사례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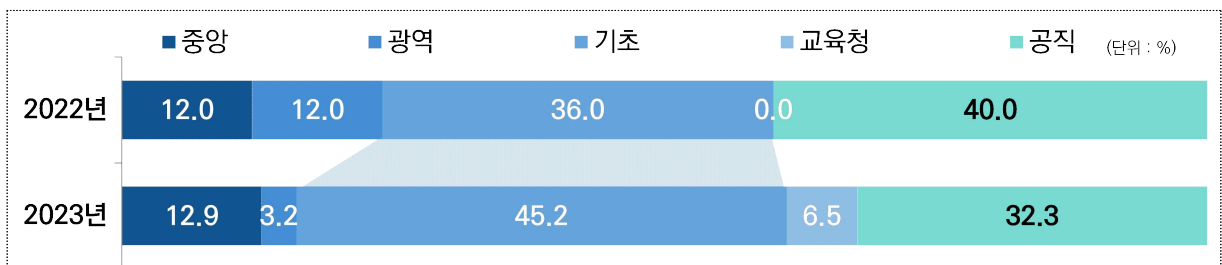
- (현황) 부패실태 감점으로 반영된 부패사건 중 ‘인사·채용’ 관련 사안은 전년 대비 발생 건수(-19건)와 비율(-5.7%p) 모두 감소

< 전년 대비 ‘인사·채용’ 관련 감점사건 변동 현황 >



- (기관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채용 관련 비위는 14건에서 18건으로 증가('22년, 14건 → '23년, 18건)

< 기관 유형별 인사·채용 관련 비위 발생 현황 >



VII. 향후 계획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4.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4.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4.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4.5월)

별첨.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

1. 중앙행정기관 I (장관급) : 2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	
2 년 간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기획재정부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환경부 (▲1등급)	검찰청 (-) 고용노동부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 (-) 기획재정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통일부 (▲2등급) 환경부 (▲1등급)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조정실 (-) 국토교통부 (▲1등급) 금융위원회 (▲1등급) 기획재정부 (▲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1등급)	
3 년 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등급) 검찰청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보훈부 (▼1등급) 국방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보건복지부 (▼1등급)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1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교육부 (-) 국무조정실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보건복지부 (-) 외교부 (▲2등급)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2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등급) 교육부 (-) 국가보훈부 (▼1등급) 국방부 (▼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1등급)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등급) 환경부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년 간	교육부 (▼1등급) 국토교통부 (-) 법무부 (▼1등급) 여성가족부 (-) 외교부 (-) 통일부 (-)	국방부 (▼1등급) 법무부 (▼1등급) 여성가족부 (▼1등급)	검찰청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1등급) 법무부 (▼1등급) 외교부 (-)	
5 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1등급)	국토교통부 (▼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등급) 통일부 (▼2등급)	

2. 중앙행정기관Ⅱ(차관급) : 21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분야	질병관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분야	관세청 (-) 기상청 (▲2등급) 농촌진흥청 (-) 법제처 (-) 인사혁신처 (▲2등급) 통계청 (▼1등급)	농촌진흥청 (-) 법제처 (-) 소방청 (▲2등급) 인사혁신처 (▲3등급) 질병관리청 (▼1등급) 통계청 (-)	관세청 (-) 국세청 (▲1등급) 기상청 (▲1등급) 농촌진흥청 (-) 방위사업청 (▲1등급) 법제처 (-) 인사혁신처 (▲1등급) 조달청 (▲3등급) 질병관리청 (-)	
3 분야	국세청 (▲1등급) 방위사업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1등급)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관세청 (▼1등급) 기상청 (▲2등급) 문화재청 (▲1등급) 병무청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 특허청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경찰청 (▼1등급) 산림청 (▲1등급)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1등급) 통계청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4 분야	경찰청 (-) 문화재청 (-) 병무청 (▼2등급) 산림청 (▼1등급) 새만금개발청 (▼1등급) 소방청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1등급)	경찰청 (▼1등급) 국세청 (▼2등급) 방위사업청 (-) 산림청 (▼1등급)	문화재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5 분야	-	새만금개발청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병무청 (▼2등급) 특허청 (▼1등급)	

3.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	-	경상북도 (▲2등급)	
2 등급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 대전광역시 (▲2등급)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울산광역시 (▲1등급) 충청남도 (▲1등급) 충청북도 (▲1등급)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2등급) 부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3 등급	경기도 (-) 경상남도 (▼1등급) 광주광역시 (▼1등급)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1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서울특별시 (▼1등급) 울산광역시 (▲2등급) 전라북도 (-) 충청남도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강원특별자치도 (▼1등급)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 (▼2등급)	경상남도 (▼2등급) 경상북도 (▼2등급) 서울특별시 (-) 전라남도 (▼2등급)	경기도 (▲1등급) 대전광역시 (▼1등급) 인천광역시 (▼2등급) 전라남도 (▼1등급) 충청북도 (-)	
5 등급	인천광역시 (▼2등급)	강원특별자치도 (▼1등급) 인천광역시 (▼1등급)	강원특별자치도 (▼2등급)	

4. 기초자치단체 I(시) : 7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반기	경기 여주시 (-) 경남 사천시 (▲2등급) 경북 경주시 (-)	경남 사천시 (▲1등급)	-	
2 반기	강원 동해시 (▲2등급) 경기 고양시 (-) 경기 광명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포천시 (▲3등급) 경기 화성시 (-) 경남 거제시 (▲2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밀양시 (▲1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창원시 (▼1등급) 경남 통영시 (-) 경북 상주시 (▲2등급) 전남 순천시 (▲2등급) 전남 여수시 (▲1등급) 전북 김제시 (▲2등급) 전북 전주시 (▲2등급) 전북 정읍시 (▲2등급) 충남 당진시 (-) 충남 아산시 (▲1등급)	= 강원 동해시 (▲2등급) 강원 춘천시 (▲1등급) 경기 고양시 (▲1등급) 경기 과천시 (▲1등급) 경기 광명시 (▲2등급) 경기 구리시 (▼1등급) 경기 동두천시 (▲1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안성시 (-) 경기 여주시 (▼1등급)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용인시 (▲1등급) 경기 하남시 (▲1등급) 경기 화성시 (▲1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창원시 (-) 경남 통영시 (-) 경북 경산시 (▼1등급) 경북 경주시 (-) 경북 상주시 (▲2등급) 전남 여수시 (▲2등급) 전북 김제시 (▲1등급) 전북 전주시 (▲1등급) 전북 정읍시 (▲3등급) 충남 당진시 (▲1등급) 충남 아산시 (-)	+ 경기 고양시 (-) 경기 광주시 (▲2등급)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산시 (▼1등급)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양주시 (▲1등급) 경기 여주시 (-) 경기 오산시 (▲1등급) 경기 의정부시 (-) 경기 포천시 (▲2등급)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남 김해시 (▼1등급) 경남 밀양시 (▲1등급) 경남 사천시 (▲2등급) 경남 양산시 (▲1등급) 경남 진주시 (▲1등급) 경남 창원시 (▼1등급) 경북 경주시 (▼1등급) 경북 구미시 (-) 경북 김천시 (▲1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전남 순천시 (▲1등급) 전북 군산시 (▲2등급) 전북 김제시 (▲3등급) 전북 익산시 (▲1등급) 전북 정읍시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반기	강원 춘천시 (▲1등급) 경기 과천시 (-) 경기 광주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성남시 (▲1등급) 경기 수원시 (▼1등급) 경기 시흥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양주시 (▲1등급) 경기 용인시 (▲2등급) 경기 의왕시 (-)	강원 삼척시 (▲1등급) 강원 속초시 (-) 경기 군포시 (▼1등급) 경기 김포시 (▼1등급)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안산시 (-) 경기 안양시 (▼1등급) 경기 이천시 (▼2등급)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포천시 (▲1등급) 경남 거제시 (▲1등급) 경남 밀양시 (-)	강원 동해시 (▲1등급) 강원 춘천시 (▲2등급) 경기 과천시 (-) 경기 광명시 (▼1등급) 경기 군포시 (-) 경기 김포시 (-) 경기 남양주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시흥시 (-) 경기 안성시 (▼1등급) 경기 용인시 (-) 경기 의왕시 (-) 경기 파주시 (-)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기 이천시 (-) 경기 파주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하남시 (-) 경남 진주시 (-) 경북 구미시 (▼1등급) 경북 영주시 (-) 경북 영천시 (-) 경북 포항시 (▼1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전북 익산시 (-)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천안시 (▼2등급) 충북 청주시 (▼1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경남 진주시 (▼1등급) 경북 영천시 (▲1등급) 경북 포항시 (-) 전남 광양시 (▲2등급) 전남 나주시 (▲2등급) 충남 공주시 (-) 충남 서산시 (▼1등급) 충남 천안시 (▼1등급)	경기 평택시 (▼1등급) 경기 하남시 (-) 경기 화성시 (▼1등급) 경남 통영시 (-) 경북 상주시 (▲1등급) 경북 안동시 (-) 경북 영주시 (-) 경북 영천시 (-) 경북 포항시 (▼1등급) 전남 광양시 (-) 전남 여수시 (-) 전북 전주시 (▲1등급) 충남 논산시 (-) 충남 당진시 (▼1등급) 충남 보령시 (-) 충남 서산시 (-) 충남 아산시 (-) 충북 청주시 (▼1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강원 강릉시 (-)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구리시 (▼2등급) 경기 남양주시 (▼1등급) 경북 경산시 (▼1등급)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안동시 (▼1등급) 전남 광양시 (▼1등급) 전북 군산시 (-) 충남 계룡시 (-) 충남 논산시 (▼1등급) 충북 제천시 (▼1등급)	= 강원 강릉시 (▼1등급) 강원 원주시 (-) 경기 광주시 (-) 경기 시흥시 (▼1등급) 경기 의왕시 (▼2등급) 경기 의정부시 (▼1등급) 경북 구미시 (-) 경북 안동시 (▼1등급) 경북 영주시 (▼1등급) 전남 목포시 (-) 전남 순천시 (▲1등급) 전북 익산시 (▼1등급) 충남 계룡시 (-) 충남 논산시 (▼1등급) 충남 보령시 (-) 충북 제천시 (▼1등급) 충북 청주시 (▼2등급) 충북 충주시 (▼1등급)	+ 강원 강릉시 (-) 강원 속초시 (-) 강원 원주시 (-) 경기 구리시 (▼1등급) 경기 동두천시 (▼1등급) 경기 수원시 (▼2등급) 경기 이천시 (-) 전북 남원시 (▼1등급) 충남 계룡시 (-) 충남 천안시 (▼2등급) 충북 제천시 (-)	
5 등급	강원 삼척시 (-) 강원 태백시 (▼2등급) 경북 문경시 (-) 전남 목포시 (▼2등급) 전북 남원시 (▼1등급) 충남 공주시 (▼3등급)	강원 태백시 (▼3등급) 경기 양주시 (-) 경북 김천시 (▼1등급) 경북 문경시 (-) 전북 군산시 (-) 전북 남원시 (▼1등급)	강원 삼척시 (-) 강원 태백시 (▼1등급) 경북 경산시 (▼2등급) 경북 문경시 (-) 전남 목포시 (▼2등급) 충남 공주시 (▼2등급)	

5. 기초자치단체Ⅱ(군) : 8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반기	경북 예천군 (▲1등급)	경북 예천군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전남 보성군 (-)	부산 기장군 (▲1등급)			
	충남 부여군 (-)	전남 보성군 (▲1등급)			
	충북 진천군 (▲2등급)	충북 옥천군 (▲2등급)			
	충북 진천군 (▲1등급)				
2 반기	경기 양평군 (▲2등급)	강원 양구군 (▲1등급)	경기 양평군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경남 거창군 (-)	강원 철원군 (▲1등급)	경남 거창군 (-)		
	경남 남해군 (▼1등급)	강원 평창군 (-)	경남 남해군 (▼1등급)		
	경남 산청군 (-)	경기 연천군 (-)	경남 산청군 (▲1등급)		
	경남 창녕군 (▲1등급)	경남 남해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하동군 (-)	경남 산청군 (-)	경남 창녕군 (-)		
	경남 함안군 (▼1등급)	경남 창녕군 (▲1등급)	경남 하동군 (-)		
	경북 성주군 (-)	경남 하동군 (▲1등급)	경남 함양군 (-)		
	경북 청송군 (▲1등급)	경남 함안군 (▼1등급)	경북 성주군 (-)		
	경북 칠곡군 (▲2등급)	경북 청송군 (▲2등급)	경북 예천군 (-)		
	대구 군위군 (▲2등급)	대구 군위군 (▲1등급)	경북 청송군 (▲1등급)		
	대구 달성군 (▲1등급)	전남 강진군 (▲1등급)	경북 칠곡군 (▲2등급)		
	부산 기장군 (▲1등급)	전남 영광군 (▲1등급)	대구 군위군 (▲2등급)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영암군 (▲1등급)	대구 달성군 (▲2등급)		
	전남 영광군 (-)	전남 진도군 (▲3등급)	전남 보성군 (-)		
	전남 영암군 (▲1등급)	전남 함평군 (▲1등급)	전남 영광군 (▼1등급)		
	전남 장성군 (-)	충남 부여군 (▼1등급)	전남 완도군 (-)		
	전남 진도군 (▲2등급)	충남 예산군 (▼1등급)	전남 장성군 (-)		
	전남 함평군 (▲2등급)	충남 청양군 (▲1등급)	전남 함평군 (▲2등급)		
	전북 부안군 (-)	충남 홍성군 (▲1등급)	전남 해남군 (-)		
	충남 서천군 (▲1등급)	충북 괴산군 (-)	전북 부안군 (-)		
	충남 예산군 (▼1등급)	충북 보은군 (-)	전북 장수군 (▲2등급)		
	충남 홍성군 (▲1등급)	충북 음성군 (▲1등급)	충남 금산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부여군 (▼1등급)		
	충북 음성군 (-)		충남 서천군 (▲1등급)		
			충남 예산군 (-)		
			충남 홍성군 (-)		
			충북 음성군 (▼1등급)		
		충북 진천군 (▲1등급)			
3 반기	강원 인제군 (▲2등급)	강원 고성군 (▲1등급)	강원 인제군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강원 정선군 (-)	강원 양양군 (-)	강원 정선군 (▲1등급)		
	강원 철원군 (▲1등급)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평창군 (▼1등급)		
	강원 평창군 (▼2등급)	강원 화천군 (-)	강원 홍천군 (▲1등급)		
	강원 홍천군 (-)	경남 거창군 (▼1등급)	강원 횡성군 (▲1등급)		
	강원 횡성군 (▲2등급)	경남 고성군 (▼1등급)	경남 고성군 (▲1등급)		
	경남 고성군 (-)	경북 성주군 (-)	경남 함안군 (-)		
	경남 의령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합천군 (▼1등급)		
	경남 함양군 (-)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고령군 (-)		
	경남 합천군 (-)	경북 칠곡군 (▲1등급)	경북 영덕군 (-)		
	경북 고령군 (-)	대구 달성군 (-)	경북 울진군 (▲2등급)		
	경북 울진군 (▲2등급)	울산 울주군 (-)	경북 의성군 (▼1등급)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단계	경북 의성군 (▲1등급) 경북 청도군 (-)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강진군 (▲1등급) 전남 구례군 (-)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완도군 (-) 전남 해남군 (▼1등급) 전남 화순군 (-) 전북 고창군 (-) 전북 무주군 (-) 전북 완주군 (▲1등급) 전북 임실군 (-) 전북 장수군 (-) 전북 진안군 (-) 충남 금산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괴산군 (-) 충북 보은군 (▼1등급) 충북 증평군 (▼1등급)	인천 옹진군 (-) 전남 고흥군 (▲1등급) 전남 곡성군 (▼1등급) 전남 구례군 (▼1등급) 전남 담양군 (▼1등급) 전남 무안군 (▲1등급)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무주군 (▲2등급) 전북 부안군 (▼1등급) 전북 순창군 (▼1등급) 전북 완주군 (▲1등급) 전북 임실군 (-) 충남 서천군 (-) 충북 영동군 (▲1등급) 충북 증평군 (▼2등급)	경북 청도군 (▼1등급) 부산 기장군 (▲1등급) 인천 강화군 (▲1등급) 전남 강진군 (-) 전남 고흥군 (-) 전남 구례군 (-) 전남 담양군 (-) 전남 무안군 (-) 전남 영암군 (-) 전남 장흥군 (▼1등급) 전남 진도군 (-) 전남 화순군 (▼1등급) 전북 고창군 (▲1등급) 전북 완주군 (-) 전북 임실군 (▲1등급) 전북 진안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영동군 (-) 충북 옥천군 (▼1등급) 충북 증평군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강원 고성군 (-) 강원 양구군 (-) 경기 가평군 (▼2등급) 경기 연천군 (▼2등급) 경북 영덕군 (-) 경북 영양군 (-) 울산 울주군 (-) 인천 옹진군 (▼1등급) 전남 곡성군 (▼2등급) 전남 장흥군 (-) 충남 태안군 (▼2등급) 충북 단양군 (▼1등급) 충북 영동군 (▼1등급)	강원 인제군 (-) 강원 정선군 (▼2등급) 강원 횡성군 (▼1등급) 경기 가평군 (▼1등급) 경기 양평군 (-) 경남 합천군 (-) 경북 고령군 (▼1등급) 경북 봉화군 (-) 경북 영덕군 (-) 경북 울진군 (▼1등급) 경북 청도군 (-) 인천 강화군 (-) 전남 신안군 (▼2등급) 전남 완도군 (-) 전남 장성군 (-) 전남 해남군 (▼1등급) 전북 장수군 (▼1등급) 전북 진안군 (▼1등급) 충남 금산군 (▲1등급) 충남 태안군 (▼1등급) 충북 단양군 (▼2등급)	강원 고성군 (-) 강원 영월군 (▼2등급) 강원 철원군 (-) 경기 가평군 (▼2등급) 경기 연천군 (-) 경북 봉화군 (▲1등급) 경북 울릉군 (-) 울산 울주군 (▼1등급) 인천 옹진군 (-) 전남 곡성군 (-) 전북 무주군 (▼2등급) 충남 태안군 (▼2등급) 충북 괴산군 (▼1등급) 충북 단양군 (-) 충북 보은군 (▼1등급)	
	강원 양양군 (▼1등급) 강원 영월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북 봉화군 (-) 경북 울릉군 (-) 전남 신안군 (▼2등급) 전북 순창군 (▼2등급)	강원 영월군 (-) 경남 의령군 (-) 경남 함양군 (▼2등급) 경북 울릉군 (-) 전남 장흥군 (-)	강원 양구군 (-) 강원 양양군 (▼1등급) 강원 화천군 (-) 경북 영양군 (▼1등급) 전남 신안군 (▼1등급) 전북 순창군 (▼1등급)	

6. 기초자치단체(구) : 69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번	서울 강남구 (▲2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서울 구로구 (-)	부산 영도구 (▲1등급) 부산 해운대구 (▲2등급)	광주 광산구 (▲1등급) 대구 북구 (▲1등급) 서울 강남구 (▲1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번	광주 광산구 (▲1등급) 광주 동구 (-) 광주 북구 (-) 광주 서구 (▲2등급) 대구 동구 (-) 대구 북구 (▼1등급) 대전 대덕구 (▲1등급) 대전 서구 (-) 부산 동래구 (▲2등급) 부산 부산진구 (▲1등급) 부산 수영구 (▲1등급) 부산 해운대구 (▲1등급) 서울 강동구 (▲1등급) 서울 동작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송파구 (▲2등급) 서울 중랑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동구 (▲1등급) 대구 수성구 (▲1등급) 대구 중구 (-) 대전 대덕구 (-) 부산 동래구 (-) 부산 부산진구 (▲1등급) 부산 북구 (▼1등급) 부산 수영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동작구 (▲2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용산구 (-) 서울 중랑구 (▲1등급) 울산 동구 (▲1등급) 인천 남동구 (-) 인천 부평구 (-) 인천 연수구 (▲1등급)	+ 광주 동구 (-) 광주 북구 (▼1등급) 광주 서구 (▲1등급) 대구 동구 (-) 대구 서구 (▲1등급) 대전 서구 (-) 부산 부산진구 (▲1등급) 서울 강서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동대문구 (▲1등급) 서울 서초구 (▲1등급) 서울 성동구 (▲1등급) 서울 송파구 (▲3등급) 서울 양천구 (-) 서울 용산구 (-) 서울 은평구 (▲1등급) 서울 종로구 (▲1등급) 서울 중구 (▲2등급) 서울 중랑구 (▲1등급)		-
3 번	대구 남구 (▲1등급)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서구 (-) 대구 수성구 (▼1등급) 대구 중구 (▼1등급) 대전 동구 (▲1등급) 대전 유성구 (▲1등급) 대전 중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 부산 북구 (-) 부산 사하구 (-) 부산 연제구 (▼1등급) 서울 강북구 (-) 서울 강서구 (▼1등급) 서울 관악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노원구 (▲2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성북구 (▼1등급) 서울 양천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광주 광산구 (-) 광주 동구 (-) 광주 서구 (▲1등급) 대구 남구 (▲2등급) 대구 북구 (▼1등급) 대전 동구 (-) 대전 서구 (▲1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금정구 (-) 부산 남구 (▼1등급) 부산 사상구 (-) 부산 사하구 (▼1등급) 부산 연제구 (▼1등급) 부산 중구 (-) 서울 강남구 (-) 서울 강동구 (▼1등급) 서울 강서구 (-) 서울 관악구 (▲1등급) 서울 광진구 (▼1등급) 서울 금천구 (-) 서울 동대문구 (▲1등급)	광주 남구 (▼1등급) 대구 남구 (▲1등급) 대구 달서구 (▼1등급) 대구 중구 (-) 대전 대덕구 (▲1등급) 대전 유성구 (▲1등급) 대전 중구 (▲1등급) 부산 금정구 (▼1등급) 부산 남구 (-) 부산 동래구 (-) 부산 북구 (-) 부산 수영구 (▲1등급) 부산 연제구 (-) 부산 해운대구 (▼1등급) 서울 강동구 (-) 서울 강북구 (-) 서울 관악구 (▼1등급) 서울 금천구 (-) 서울 노원구 (-) 서울 도봉구 (-) 서울 동작구 (▼1등급) 서울 마포구 (▼1등급)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번	서울 용산구 (▼2등급) 서울 은평구 (-) 서울 종로구 (-) 서울 중구 (▲1등급) 울산 동구 (▲2등급) 울산 북구 (▲1등급) 인천 미추홀구 (-) 인천 부평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성북구 (-) 서울 송파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서울 중구 (▲1등급) 울산 북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서울 서대문구 (▼1등급) 서울 성북구 (▼1등급) 서울 영등포구 (▼1등급) 울산 북구 (▲2등급) 인천 남동구 (▼1등급) 인천 미추홀구 (▲1등급) 인천 중구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광주 남구 (▼2등급) 부산 강서구 (-) 부산 동구 (▲1등급) 부산 사상구 (▼1등급) 부산 서구 (▼1등급) 부산 영도구 (▼2등급) 부산 중구 (▼1등급) 서울 도봉구 (-) 서울 동대문구 (-) 서울 마포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1등급)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인천 연수구 (▼2등급) 인천 중구 (▼1등급)	=	+	
	울산 남구 (▼1등급)	광주 남구 (▼2등급) 서울 도봉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종로구 (▼1등급) 인천 중구 (▼2등급)	대구 수성구 (▼2등급) 대전 동구 (▲1등급) 부산 동구 (▲1등급) 부산 사상구 (▼1등급) 부산 사하구 (▼1등급) 부산 중구 (▼1등급) 울산 동구 (▲1등급) 울산 중구 (-) 인천 계양구 (▼1등급) 인천 동구 (▲1등급) 인천 부평구 (▼1등급) 인천 서구 (▼1등급) 인천 연수구 (▼2등급)	
5 번			부산 강서구 (-) 부산 서구 (▼1등급) 부산 영도구 (▼2등급) 울산 남구 (▼1등급)	

7. 시도교육청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분야	-	부산시교육청 (▲4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분야	경남도교육청 (▼1등급) 대구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2등급) 제주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 경남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	
3 분야	경기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	경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2등급) 부산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4 분야	강원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대전시교육청 (▲1등급) 세종시교육청 (▼3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	
5 분야	-	-	강원교육청 (▼1등급)	

8. 공직유관단체 I (공기업) : 32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단 기	-	한국수력원자력 (▲1등급)	강원랜드 (▲1등급)	
2 년 단 기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1등급) 한국남부발전 (-) 한국마사회 (▲2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2등급)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2등급) 한국중부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1등급)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2등급) 한국전력기술 (-) 한국조폐공사 (▲1등급) 한국중부발전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3등급) 한국남부발전 (▲1등급) 한국마사회 (-) 한국석유공사 (▲3등급)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2등급) 한국중부발전 (▲2등급) 해양환경공단 (▲1등급)	
3 년 단 기	강원랜드 (▲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전력기술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1등급)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전KDN (-) 해양환경공단 (-)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1등급) 한국동서발전 (-) 한국마사회 (▲2등급)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전KDN (-) 한전KPS (▼1등급)	+ 그랜드코리아레저 (▼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1등급) 한국도로공사 (-) 한국동서발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등급) 한국부동산원 (-) 한국서부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공사 (▼1등급) 한전KDN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년 단 기	대한석탄공사 (-) 에스알 ('22 미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등급)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PS (▼2등급)	대한석탄공사 (▼2등급) 에스알 ('22 미발표)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1등급) 한국석유공사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1등급)	대한석탄공사 (▲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1등급) 한국가스공사 (▼1등급) 한국전력기술 (▼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2등급)	
5 년 단 기	-	강원랜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해양환경공단 (▼2등급)	에스알 ('22 미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1등급) 한전KPS (▼3등급)	

9.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기관) : 5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단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기술보증기금 (▲1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2등급)	
2 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국민연금공단 (-) 기술보증기금 (-) 도로교통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1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장학재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국민연금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1등급) 도로교통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1등급) 예금보험공사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장학재단 (▲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 국민연금공단 (▼1등급) 기술보증기금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도로교통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신용보증기금 (-) 한국관광공사 (▲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등급)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3 단계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국립공원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근로복지공단 (▼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1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공무원연금공단 (▼1등급) 근로복지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1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1등급)	국가철도공단 (▲2등급) 국립공원공단 (▼1등급) 근로복지공단 (▼2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예금보험공사 (-) 우체국금융개발원 (▲2등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연구재단 (▼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한국장학재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단계	국가철도공단 (-) 국립생태원 (▼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1등급) 한국국제협력단 (▼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환경공단 (▼2등급)	국가철도공단 (▼1등급) 국립공원공단 (-) 국립생태원 (▼2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등급)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1등급)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등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한국환경공단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2등급) 국립생태원 (▲1등급) 국토안전관리원 (▼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1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등급) 한국소비자원 (▼2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단계	-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2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등급)	

10. 공직유관단체Ⅲ(중점) : 4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한전원자력연료 (▲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한국은행 (▲1등급) 한전원자력연료 (▲2등급)	대한적십자사 (▲1등급)	
2 년 간	국제방송교류재단 (▲2등급)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대한적십자사 (-) 산림조합중앙회 (▲2등급)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등급)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은행 (-) 한전MCS (-)	국방기술품질원 (▲1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 금융감독원 (▲1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적십자사 (-) 중소기업은행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은행 (▲1등급)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전MCS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코레일유통 (▲2등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등급)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등급) 한전원자력연료 (-)	
3 년 간	국방기술품질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등급)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1등급) 코레일유통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등급) 주택관리공단 (-) 코레일유통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등급) 한국체육산업개발 (▲1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한국환경보전원 (▲2등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국방기술품질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2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감독원 (-) 산림조합중앙회 (▲1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인구보건복지협회 (▲2등급) 주택관리공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은행 (▼1등급) 창업진흥원 (▲1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등급) 한국산업은행 (▼1등급) 한국은행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전MCS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년 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체육회 (-) 창업진흥원 (-) 한국거래소 (▼1등급)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환경보전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 창업진흥원 (-) 한국거래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1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등급) 대한체육회 (▼1등급) 한국거래소 (▼1등급) 한국예탁결제원 (▼2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2등급)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2 미측정) 한국환경보전원 (▲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년 간	한국체육산업개발 (▼2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대한체육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체육산업개발 (▼3등급)	

11. 공직유관단체IV(지방공사공단) : 39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년 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등급) 부산교통공사 (▲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 (▲4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2 년 간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울산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충청남도개발공사 (-)	= 강원개발공사 (▲1등급)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 (▼1등급)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서울교통공사 (-)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안산도시공사 (▲2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등급)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 광주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부산교통공사 (-) 부산도시공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울산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등급)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년 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대전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2등급)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안산도시공사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1등급)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전북개발공사 (▼1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등급) 대전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1등급) 부산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 (▼1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 (-)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전남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1등급)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전도시공사 (-) 부산환경공단 ('22 미측정) 성남도시개발공사 (▲2등급) 세종도시교통공사 (▲1등급) 인천교통공사 (▼1등급) 인천시설공단 (▼1등급) 전북개발공사 (-) 창원시설공단 ('22 미측정)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4 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강원개발공사 (▼1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경남개발공사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 (-) 부산시설공단 (▼1등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등급)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인천도시공사 (▼1등급) 충북개발공사 (-)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 경남개발공사 (▲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 (▼1등급)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남양주도시공사 (▼1등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2 미발표) 대전교통공사 (▼1등급) 부산시설공단 (▼1등급) 안산도시공사 (▼2등급)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등급) 인천도시공사 (▼2등급) 인천환경공단 ('22 미측정) 충북개발공사 (▲1등급) 화성도시공사 ('22 미측정)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5 등급	-	경기주택도시공사 (▼1등급) 대구도시개발공사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등급) 인천도시공사 (▼1등급) 충북개발공사 (▼1등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등급) 강원개발공사 (▼1등급) 수원도시공사 ('22 미측정)	

12. 공직유관단체 V(연구원) : 21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연구원 유형은 '22년 평가 미 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평가 대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평가 대상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평가 대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 평가 대상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5 평가 대상	-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